

연구총서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변화와 추이

김 영 춘

통 일 연 구 원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남북정상회담 실현 등 최근 정세 변화는 북·일 쌍방에 현안에 대한 대립이 있는 가운데도 접점을 찾으려는 의지를 촉진시켰다.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위원장은 식민지 지배 등 과거 보상과 관련, 일본의 경제협력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평양선언문(2002.9.17)을 채택하였다.

일본의 한반도 정책은 한국과의 협력증대를 통한 신뢰구축 및 적극 진출 정책과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일본의 한반도 정책 추이

일본은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가 이룩되기를 바라며 자국의 영향력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 일본의 한반도 정책은 미국의 동북아정책 및 동북아의 국제질서 그리고 미·일관계 및 한·일관계에 의해 제약을 받아왔다. 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위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1965)를 중재하였다.

닉슨 독트린 이후 미·중 화해로 동북아의 데탕트 분위기하에서, 한국은 7·4 공동성명에서 한국정부가 북한정부를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자 일본은 정경분리정책을 들고 나와 비정치 분야(무역)에서 북한과 관계를 맺으면서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였다.

냉전이후 일본은 동북아질서의 변화, 미·일간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에 따른 일본의 역할증대, 한국의 북방정책 성공 및 북한의 대일접근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북수교 교섭에 의욕을 보였다. 8차(1991.1~92.11)에 걸친 북·

일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교섭 중단은 표면적으로는 이은혜 문제를 계기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일교섭 중단의 실질적 원인은 북한의 핵사찰 문제에 있었다.

1994년 10월 21일 미·북 간의 핵교섭이 타결(제네바 회담)되자, 일본의 연립여당 3당 대표단이 1995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방북하여 북·일 수교교섭의 전제없는 재개에 합의하였다.

한국의 잠수함사건(1996.9) 이후 납치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계의 사사가와 요헤이(笹川陽平) 일본재단(舊日本船舶振興會) 이사장이 1997년 6월 하순 방북하여 장성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조직)부장(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의 남편)과 만나서 일본인 처 귀향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1997년 11월 8일 북한에 있는 일본인 처(1,831명) 중 제1진 15명이 일본을 방문하였고, 제2진 12명이 1998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일본에 도착하였다.

일본인 처 귀향문제는 언론과 여론의 반복정서를 가라앉히기는 커녕 오히려 납치사건을 더욱 부각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이 당시 일본측이 납치문제를 수교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는 것은 자민당이 국민여론의 악화로 더 이상 수교교섭을 서두를 계획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사건과 1999년 들어서서 일본인 납치의혹사건과 3월의 북한공작선의 일본영해침투사건, 그리고 7월과 8월의 북한 미사일 시험 재발사 움직임 등으로 일본과 북한관계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였다. 북한은 일본에 대해 ‘접근과 미사일 협박’이라는 이중전략을 전개하였고, 일본은 북한에 대하여 한·미·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화과 억지’ 전략을 추구하였다.

북한과 미국은 1999년 9월 12일 베를린 고위급회담에서 대포동

미사일 발사 유예와 경제제재 해제 및 식량지원을 맞바꾸는 타협안에 합의했다.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낸 것은 무엇보다 쏘이였다. 북한은 1999년 12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이끄는 초당파 의원단이 찾아갔을 때부터 식량을 요구했다.

일본과 북한의 9차 수교교섭 본 회담이 2000년 4월 4일에서 8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1991년 1월에서 1992년 11월까지 8차 회담이 이은혜 문제로 결렬된 후 7년 5개월만에 재개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일본측에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반면 일본은 배상은 곤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핵 무기 및 미사일 개발 중단, 일본인 납치의혹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2. 남북정상회담(2000. 6) 이후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변화된 일본의 안보정책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오자와의 보통국가론 논쟁은 북한 핵문제, 노동1호 발사실험 그리고 경제난 심화를 계기로 북한장래와 한반도 유사에 대한 불안심리와 맞물려서 이루어졌다. 미·일 신안보선언(1996) 이후 자민당의 국방측 및 자위대의 간부들은 신대강(1995)이 평화시에서 일본 주변 유사시로 이해하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였고, 이 점을 보충하기 위해 신가이드라인을 작성(1997)하였다. 신방위협력지침의 가장 큰 특징을 일본의 군사역할 범위를 확대,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유사시에도 자위대가 일정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미국과의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참여 명분을 주었다는 데 있다.

일본 자위대의 방위전략(2001)이 옛 소련을 주적개념으로 한

‘북방방위’에서 중국을 겨냥한 ‘남방방위’로 변화하였다. 새로운 방위 계획은 부시 행정부의 중국·북한 견제전략이나 일본 우익세력의 중국·북한 위협론과 맞물린 것이다.

미국의 테러 참사(2001.9.11) 이후 일본정부는 미국의 테러보복 공격을 계기로 자위대가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테러대책 특별법안’과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한 ‘자위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0.5)하여 통과(10.29)시켰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제10차 북·일 수교교섭은 본격 협상의 기반을 다지는 회담이었다. 양측은 일본의 과거청산과 북한의 납치의혹 문제로 쟁점을 줄임으로써 정치적 타결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 북한의 정태화 대사는 연내 수교 입장도 내비쳤다. 남북정상회담 실현 등 최근 정세 변화는 북·일 쌍방에 현안에 대한 “대립이 있는 가운데에도 접점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촉진시켰다.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위원장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등 과거보상과 관련, 일본의 경제협력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평양 선언문을 2002년 9월 17일 채택하였으며, 수교재개도 10월부터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배와 관련,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한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혔다. 김정일 위원장은 납치문제에 직접 관여(군부강경파)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북한이 일본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행방불명자 문제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

북한은 핵사찰에 협력하겠다는 의사와 또한 2003년 이후 탄도미사일 실험을 무기한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미·북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납치문제와 관련, 앞으로 사망자들 사인에 대한 조사, 생존자들의 조속한 귀국, 재발방지대책 등이 양국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북한에 납치됐다 사망한 8명의 일본인들에 대한 타살의혹이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에서 핵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협력도 곤란하다는 뜻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분명히 전달하면서, 북한과의 수교교섭과정에서 미국과 공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북·일 수교는 미·북 대화의 폭과 속도에 사실상 연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냉전이 종식됨으로서 미·일 안보관계는 재정립의 계기를 맞이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은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일은 방위 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유사 사태 발생시 일본의 대미 후방지원의 길을 열었다. 그에 의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미국을 후방지원 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한·일 간의 직접적인 안보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미·일 안보관계의 재정립에 즈음하여 일본은 한국과의 안보관계 역시 향상시키기를 희망한다.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하지만 기존의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즉, 북·일관계의 진전사항을 사전에 한국측과 협의하여 조정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2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8종의 새 역사 교과서가 2001년 4월 3일 검정을 통과함으로써 역사왜곡 논란이 빚어졌었다. 고이즈미 총리가 2001년 8월 14일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는 것은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고 일본의 우경화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한국은 비판하였다.

한·일 양국간의 가장 큰 현안은 만성적인 무역불균형문제이다. 일본 제조업의 범아시아 분업체제에서 소외된 채 일본 부품수입 의존적인 한국의 가공무역 구조는 결과적으로 대일 무역역조 문제를 일상화시키게 된다. 최근 일본은 아시아와 일본의 경기불황과 회복에 밀접한 상호의존성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면서, 또한 세계 지역통합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안하였다.

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한·일관계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는 현안의 북·일수교 외에도 일본의 국제역할증대 정책의 일환인 미·일관계의 강화, 군사현대화 및 해외파병정책 그리고 일본의 신보수주의화 등을 변수로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은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유사상황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우경화 영향으로 한국 및 주변국들과 계속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역시 미·일강화로 세력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대한반도 관계를 변화·촉진시키는 요인이 있는가 하면, 양국관계를 지속·유지시키는 요인도 존재한다. 지속요인은 미국의 균형자 역할, 한·미 관계유지, 그리고 한·일 경제협력 및 교류 확대 등이다. 한·일간의 안보관계에 있어서 큰 특징은 미국을 중개로 하는 관계이다. 한·일 안보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큰 틀은 한·미와 미·일 안보체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한반도 안보정책은 미·일관계라는 큰 틀 내에서 일본의 역할증대, 주변국의 유사시 후방활동 등 그리고 신보수주의자들의 행동 등 다양한 갈등요인으로 인하여 한국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만 국교단절 등의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북·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외교행위가 상황대응형에서 상황조정형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국교가 없는 북한을 고이즈미 총리가 방문한 것은 일본열도에 들끓는 납치문제에 대한 반복정서, 1990년대부터 일어나고 있는 우경화 분위기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계획에 몰

두하는 사이의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급속한 변화없이 한반도의 개입과 현상 유지정책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아래서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증대를 통한 신뢰구축 및 적극진출정책과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나, 기존의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한국편향의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 차

I. 서론	1
II.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추이	4
1. 전후 냉전시대(1945~1969): 한·미, 미·일 안보협력관계	4
2. 데탕트시대(1969~1979): 일본의 대북접근 시도	6
3. 신냉전시기(1979~1980年代 중반):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7
4. 냉전이후시기(1990~2000): 북·일수교 교섭 및 한·미·일 안보 공조	9
가. 수교교섭의 배경과 3당 공동선언(1990. 9)	9
나. 수교교섭(1차~8차)	13
다. 제네바 회담 타결(1994. 10) 및 일본의 대북쌀지원(1995. 6) ..	18
라. 수교교섭의 교착화	22
마. 일본인 처 귀향합의(1997. 9) 및 납치문제 부각	24
바. 대포동 발사문제 타결(1999. 9)과 9차 수교교섭 재개(2000. 4)	27
III.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34
1.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34
가. 미·일동맹의 강화요인	34
나.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	41
다. 미·일동맹과 부시·고이즈미 정권	47
2. 일본의 남북한정책	50
가. 일본의 대북한정책	50
나. 일본의 대한국 정책	67

IV.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76
1. 변화촉진요인	76
가. 미·일관계 강화	76
나. 군사현대화 및 해외파병정책	78
다. 일본의 신보수주의 강화	78
라. 한반도 영향력 확대 모색	80
2. 지속요인	80
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균형자 역할	80
나. 한·미관계 유지	81
다. 한·일경제협력 및 교류확대	81
3. 전망	82
V. 결론	84

참고문헌

I. 서론

한반도는 섬나라인 일본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있어 과거부터 일본과의 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를 아시아 대륙으로의 진출경로 혹은 대륙 세력의 일본침공을 막기 위한 전략적 완충지역으로 인식하여 왔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한반도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가 이룩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에 대한 일본의 기본목표는 미·일 안보조약 및 한·미 안보조약을 기반으로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의 대한반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북한 접근을 시도해 왔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수동적인 입장이 탈냉전과 함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화를 맞게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1988.7)과 한국의 적극적인 북방정책 전개로 대북 관계개선을 위한 한국으로부터 제약요인이 완화됨에 따라 일본은 1990년 9월 가네마루 전 부총재를 대표로 한 자민당·사회당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하여(1990.9.24~28) 일·북한 관계개선 교섭을 적극 추진하였다.

국제 냉전구조의 붕괴에 따라 일본은 옛 소련의 위협을 삭제한 반면 1993년 5월 29일 실시된 북한의 노동1호 발사실험 성공을 계기로 북한을 최대 위협요인으로 규정하였다.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위원장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식민지 지배 등 과거보상과 관련, 일본의 경제협력방식으로 해결하

2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변화와 추이

기로 합의하고,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핵미사일 문제에 있어서도 핵사찰에 대한 협조, 2003년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무기한 동결 등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북·일 수교교섭에서 미사일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지만 1994년 북·미 베를린합의 이후에는 미사일 문제는 한·미·일 공조 문제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수교의 최대쟁점은 경제적인 보상과 납치문제의 해결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제임스 켈리 특사가 2002년 10월 초 방북했을 때, 자위적 수단으로 농축우라늄 제조실험까지 했다는 핵개발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핵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남북정상회담(2000.6) 이후 일본에서는 북·일관계 정상화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나타났다. 국제환경의 변화에 뒤쳐진다는 우려 속에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교정상화는 선결되어야 한다고 매스·미디어와 정치가들이 일본정부에 촉구하였다.¹⁾

1990년대 이후 일본은 미·일 신동맹 구축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계기로 일본의 국제역할 증대 현상이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자위대의 활동영역 확대 및 주변사태법 제정(1998)과 군보유개헌추진 움직임 그리고 반테러특별법 제정(2001) 등에 의한 대한반도 적극 진출정책으로 표출되고 있다.

더욱이 2001년 7월 29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대승에 고무된 고이즈미 총리는 한국, 중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2001.8.13), 일본과 한국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손상시켰다. 특히 한·일관계는 신사참배문제뿐만 아니라 교과서 왜곡문제, 쫑치조업문제 등으로 얼룩져 그 동안 쌓아왔던 양국 간 군사교류도 중단되었다.

1) 岡崎久彦, “日朝これだけは 譲れない,” 『諸君』(2000.11); “남북 포커스: ‘일본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북수교,’” 『한국일보』, 2000. 11. 21.

본 고에서는 1990년대 이후 변화하고 있는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을 분석·평가하며, 또한 방향을 예측하고 전망하기로 한다.

II.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추이

1. 전후 냉전시대(1945~69): 한·미, 미·일 안보협력관계

냉전시기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 범주내에서 전개되어 왔다. 제 2차 세계대전이후 미·소냉전이 심화되자 미국은 서방진영의 지도국으로서 서방진영을 결속시켜 소련에 대항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을 ‘반공의 장벽’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을 일본경제부흥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미국은 일본을 미국의 방위체제 및 군사전략 하에 편입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일간에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군사·안보적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 한·일간 간접적인 군사·안보적 협력관계와 관련된 합의는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의 「극동조약」에 명시되어 있다. 미·일 안보조약 제6조는 “일본의 안전에 기여하고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에 있는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²⁾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극동조항」이 상정하고 있는 극동 유사시의 지리적 및 전략적 범위에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한·일교섭은 활발한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미국의 관심이 아시아에서 크게 증대되었고, 한·미·일 3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제정세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1964년 10월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아시아에서 팽창세력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의 핵실험으로 정치적(위협세력), 그리고 심리적(핵알레르기 반응)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자민당 내에서는 1964년 기시(岸), 사또(佐藤), 이시이(石井)

2) 「朝日新聞」, 1960. 6. 23.

등이 주도하여 아시아연구소를 설립하였는데, 일본의 안보노선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한국, 자유중국, 그리고 미국과 긴밀한 유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1960년 초에는 이미 서구와 일본의 대외준비고는 미국과 맞먹는 것이 되었고, 반면에 미국의 금보유고는 1948년의 244억 달러에서 1959년 말에는 195억 달러로 감소하여 미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으며, 소위 Triffin Dilemma에 놓이게 되었다.³⁾ 일본의 경우 이케다(池田) 수상외의 국민소득 배증정책에 의한 과잉투자와 구조적 불황으로 인하여 아시아의 시장이 요구되었다. 한국은 1960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원조가 2억 달러를 넘지 못하고 감소하자 경제발전을 위해 대일 청구권자금과 일본자금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1960년도의 상황적 변화에 의하여 한·일 회담은 한·미·일 3국의 이해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수교결과를 도출하였다.⁴⁾

일본은 한·일 국교수립(1965.6.22) 이후 정치·안보·경제적인 면에서 한국과의 유대를 견지하는 한국 일변도(一邊倒) 정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여 1969년 11월 22일 「닉슨-사토폰 공동성명」 제 4항에서 미·일 양국은 “한국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에 긴요하다”는 소위 ‘한국조항’에 합의하였다.⁵⁾

북한은 한·미·일 3각군사동맹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일본에 대하여

3) Robert Triffin, *Gold and Dollar Crisis: The Future of Convertibility*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61), pp.3~14. 만약에 미국이 국제수지 균형을 엄격히 유지할 경우 세계금융준비의 원천인 달러가 고갈되어, 유동성의 부족으로 국제거래가 침체될 것이고, 그렇다고 미국이 국제수지적자정책을 계속 시행할 경우 미국의 금재고량을 초과하는 달러의 해외과잉보호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금과 달러의 위기를 동시에 몰고 온다는 것이 Triffin Dilemma이다.

4) 김영춘, “수교협상이후의 한·일관계,” 『국제정세』 (1990.7), p. 80.

5) 日本外務省編, 『外交青書: わが外交の近況』 (1969), p. 400.

적대적인 자세를 견지하였으며, 일본도 한국일변도정책에 따라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였다.

2. 데탕트시대(1969~79): 일본의 대북접근 시도

미국은 1969년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중·일과 연계하여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이 아시아로부터 역할감축을 공식화하고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일본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 및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독자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욱이 미·중 화해로 동북아에 데탕트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일본은 보다 자주적인 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한·일 정상화이후 한국중시정책을 펴왔던 일본의 외교정책은 1970년대에 진입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 1월에 열렸던 닉슨·사토 회담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사토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조항은 사실상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당시의 해석을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사태인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⁶⁾ 이러한 맥락에서 1971년 11월 일조의원연맹이 결성되었고, 중·참의원 약 240명이 가입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구노쥬지(久野忠治)가 일조의원 13명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여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1975년 「포드·미키 공동선언」에서는 ‘한국조항’의 한국을 ‘한반도’로 대체하려는 일본의 입장이 수용되어 “한국의 안전이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긴요하며 또한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전에 중요하다”는 ‘신한국조항’으로 대체되었다.⁷⁾

6) 「朝日新聞」, 1972. 1. 8.

그러면 왜 일본은 1950~60년대 한국 일변도 정책에서 남·북한 외교를 띄고 있는가? 첫째는 1971년 닉슨의 방중과 이에 따른 미·중 관계개선, 즉 동북아 데탕트체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안보는 곧 일본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며, 둘째는 7·4 공동성명에서 한국정부가 북한정부를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자 일본은 정경분리정책을 들고 나와 비정치분야에서 북한과 관계를 맺으면서 남·북한 외교를 추구했기 때문이다.⁸⁾

3. 신냉전시기(1979~1980年代 중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1980년대에 들어오자 노신영 외무장관은 한·일 외상회의(1981. 8)에서 안전보장문제와 경제협력문제를 결부시켜 제5차 경제사회개발계획(1982~97)을 위해 60억 달러의 정부차관을 일본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협력이 방위비에 대체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양측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였다. 왜 한국은 일본의 경제협력을 요청하였는가? 중요한 배경은 1980년대 동북아 기류가 신냉전체제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소련은 1980년대에 들어서자 국방비의 지출을 증가(약 15%) 시켰는데, 이 증가가 극동아시아에 상당부분 집중되었다. 반면에 미국은 베트남 신드롬 때문에 아시아에서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군의 작전해역이 동해까지 확대되자 한국의 안보가 일본방위에 직결된다는 논리로 경제협력을 요청했다고 볼 수 있다.

신 냉전시기 일본정부는 한·미·일 안보유대 강화에 따른 미국의

7) 이러한 ‘신한국조항’은 한반도에 있어서도 데탕트구조가 실현가능하다고 하는 명분하에 ‘한국의 안전’, ‘한반도의 안전’ 등으로 구분하여 ‘두 개의 한국정책’을 취하기 위한 일본의 준비작업의 일환이었다.

8) 김영춘, “수교협상 이후의 한·일관계,” p. 83.

역할분담 요청에 부응하여 미국의 정치·경제적 헤게모니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일본은 『총합안전 보장원칙』에 의거, 외국원조계획(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및 주변국에서 안보이익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을 중요한 원조대상국으로 인식하였으며, 나카소네 수상의 공식 방한(1983.1.11~12)시 40억 달러의 안보경제자금을 제공하였다.⁹⁾

한·미·일 안보유대 강화의 일환으로 한국군, 일본자위대, 주일·주한미군의 무기 및 장비가 급속히 증강되었으며, 일본은 소련의 위협증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1970년대 전수방위전략으로부터 1,000해리 해상수송로 방위를 위한 지역방위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신냉전 추세에 따라 대북한 접근을 자제하고 한국과의 안보 및 경제유대를 강화하였다. 신냉전시대 일본은 동맹국과의 안보유대를 강조하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부응하여 대북한 접근정책보다 한국안보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증진하고, 북한과는 경제, 문화 등의 교류를 서서히 증대해 나가는 것이 적당하다”¹⁰⁾고 밝힘으로써 국제 및 한반도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대북접근정책을 추진해 나갈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9) 한영구, “한국 대일 외교의 방향과 과제,” 『국제정세』 (1990. 5), pp. 60~65.

10) 日本外務省, 『外交青書:わが外交の近況』 (1981), p. 18.

4. 냉전이후시기(1990~2000): 북·일수교 교섭 및 한·미·일 안보 공조

일·북 간의 관계정상화는 6개의 시기로 나누었다. 이는 첫째, 수교교섭의 배경과 3당 공동선언(1990.9), 둘째, 1차에서 8차까지의 수교교섭(1992.11), 셋째, 대북 쌀 지원과 연립3당의 대표단 방북(1995.3), 넷째, 수교교섭의 교착화, 다섯째, 재일동포 일본인 처 귀향과 연립3당 대표단의 방북(1997.11), 여섯째, 대포동 발사 문제 타결과 수교재개 등이다. 이러한 시기의 구분은 주로 일·북 수교교섭 및 교섭재개의 움직임을 고려한 것이다.

가. 수교교섭의 배경과 3당 공동선언(1990. 9)

일본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첫째, 냉전체제의 붕괴라는 국제정치적 변화이며, 둘째, 집권 자민당의 정국돌파를 위한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7 선언에서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 나라와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으며, 9월의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다케시다(竹下) 수상에게 “북한을 국제사회에 공헌시키기 위하여 일본이 맡을 역할은 크다”고 언명했던 것이다. 7·7 선언과 관련하여 같은 날 일본정부는 “관계국과 밀접한 협의를 거쳐, 일조(日朝)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킬” 의향을 표명했고, 제18 후지야마 마루호(第十八富士山丸)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일조(日朝) 간의 모든 현안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정부견해를 발표했다.¹¹⁾

다케시다 수상은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북한과 우호적 유대를 갖고 있는 일본사회당에게 일·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일종의 중계역할을 부탁하게 되었다. 1988년 9월 7일부터 12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사회당 의원 야마구치(山口鶴男)는 북한요인들과 회담을 가졌고 귀국한 후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한다는 북한측의 의사를 다케시다 수상에게 전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공식국교가 없는 국가일지라도 경제·기술협력 및 문화교류를 할 방침”¹²⁾이라고 한 김일성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야마구치는 다케시다 수상에게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다케시다 수상은 야마구치 의원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북한의 KAL기 폭파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를 약속하였으며 서울올림픽 개막식 직전인 9월 16일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 발표하였다.¹³⁾

특히 중요했던 점은 1989년 3월 3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다케시다 수상의 답변(사죄발언)이었다. 여기서 다케시다의 북한과의 불행했던 과거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결의를 갖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진전시킬 의사를 명확히 했던 것이다.

이러한 다케시다의 메시지는 신중히 준비되어서, 평양방문 도중에 북경에 도착한 타나베(田邊) 사회당 전(前) 서기장에 의해 같은 날 중국주재 북한대사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흥미있는 점은 그가 김일성 주석에게 보내는 자민당의 가네마루(金丸) 전 부총리의 서한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타나베는 1985년 5월에 사회당 서기장으로 평양을 방문한 이래 북한 지도자와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제재조치가 해제된 후에는 사회당을 통하여 허담 서기와 연락을

11) 『朝日新聞』, 1988. 7. 7.

12) 『朝日新聞』, 1988. 9. 16

13) 『朝日新聞』, 1988. 9. 13.

취하면서, 북한지도자와 자민당 간부와의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뒷날 타나베는 다케시다 수상의 사죄발언과 가네마루 서한이 북한측의 자세변화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술회하였다.¹⁴⁾

사회당은 1989년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북한노동당 대표단을 일본사회당 전당대회에 초청하였고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인 김양진을 단장으로 한 4명의 간부가 방일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노동당 대표단이 입국하기 직전인 1월 20일에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으며 남북분단기정화를 하려는 의도가 없고 일·조관계 개선을 위해서 후지야마 마루호 문제의 조기해결을 희망하며 일·북간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제조건 없이 교섭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견해를 발표하였다.¹⁵⁾ 일본 외무성은 일본사회당을 대북한 접촉창구로서 이용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일본사회당 간부 및 정치인들의 북한방문을 통하여 북한과의 접촉 창구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북한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타나베가 1990년 5월 초 사회당의 후까다(深田) 국민운동국장을 평양에 파견하여 “가네마루씨를 단장으로 하는 자민당 대표단을 만나 후지야마 마루호의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싶다”라고 하는 북한측 의사를 갖고 돌아왔다. 이어서 7월 중순에는 사회당의 구보(久保) 부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자민당과 사회당, 그리고 조선노동당 3당이 먼저 교섭하고, 그런 연후에 정부간 교섭으로 옮긴다”는 방식에 합의했다.

이리하여 가네마루·타나베 대표단이 1990년 9월에 평양을 방문한 결과 10월중으로 후지야마 마루호의 선원 2명을 석방하고, 11월중으로 일·북 국교교섭을 시작한다는 것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9

14) 田邊誠, 金丸 訪朝團, 舞台裏, 『日刊 Asahi』 (1990. 12).

15) 『朝日新聞』, 1989. 1. 21.

월 28일에 발표되었던 3당 공동선언에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 36년간 끼친 ‘불행과 재난’뿐 아니라 ‘전후 45년간 조선인민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충분히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조선은 하나이며 북과 남이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조선인민의 민족적 이익에 합치한다”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3당 공동선언』은 일본의 국내외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3당 공동선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틀을 훨씬 벗어나는 것이고 전후 45년 간의 냉전상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었다.

가네마루가 귀국한 후, 자민당의 직책을 갖지 않은 자가 당내 합의없이 개인외교를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질외교’를 사실상 용인하고, 장래 정부간 교섭의 범위를 규정지은 것에 대하여 자민당내 일부와 공명당과 민사당 그리고 언론에서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일본의 강경파인 외무성은 3당 공동성명에 일본 정부가 구속될 수 없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나카야마(中山) 외상이 중의원 안보특별위에서 북한에 전후보상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한 것¹⁶⁾과 나카히라(中平) 대사(북·일 수교협상 일본측 대표)가 “본 회담에서 북측에 IAEA의 핵사찰 수용을 촉구할 것이며 3당 공동선언에 있는 전후 45년 간의 배상은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¹⁷⁾

16) 『朝日新聞』, 1990. 10. 5.

17) 『朝日新聞』, 1990. 12. 21.

나. 수교교섭(1차~8차)

여하튼 「3당 공동선언」 이후 북·일 간의 막후절충은 급진전을 보여 3당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대로 1991년 초부터 8차에 걸쳐 1992년 11월까지 수교교섭회담을 개최했다.

북·일간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의제의 설정과 의제에 대한 외교협상 등은 외무성이 주도하는 실무적 협상의 내용이다. 일본과 북한은 1990년 11월 북경의 예비회담에서 수교협상에서 논의될 4가지 의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합의된 협상 의제는 ① 국교정상화에 관한 기본문제, ② 경제적 문제, ③ 국제문제, ④ 쌍방에 관계되는 기타 문제이다.

제1차 국교정상화회담(1991.1.30~31)이 평양에서 열렸는데 일본의 과거 보상과 북한의 핵사찰수용문제 등 양국은 뚜렷한 이견차를 보였다. 북한의 전인철 대표는 일제 36년을 교전관계로 규정하고 ‘배상’을 요구하였으며 핵사찰은 북·일간 문제가 아닌 북·미간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나카히라 대표는 36년은 식민지와 종주국 사이의 관계이며, 재산정리에 적용되는 ‘청구권 형식의 보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북한의 핵은 일본에 위협이 되므로 핵사찰 수용을 강조하였다.

제2차 회담(1991.3.11~12)은 동경에서 개최되었는데 양측은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으나 서로 의견 차이점과 강도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식민지 교전상태 주장과 배상에 대해 종래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일본인의 귀환 문제 등에 대해 “회담이 잘 진행된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고 싶다”는 우호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핵사찰 수용문제와 남북대화 진전에 대해서 북한은 일본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제3차 회담(1991.5.20~22)은 북경에서 개최되었는데 북한의 전인철 대표는 ‘선 외교관계수립, 후 배상논의’로 종전의 ‘국교수립과 동시배상’의 입장을 변경하였으며, 핵사찰에 있어서 협상과 사찰 수용은 별개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나카히라(中平立) 대표는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① 핵사찰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핵사찰협정 체결 없이 국교정상화는 없음을 강조, 핵시설의 장소를 지명, 핵연료 재처리시설에까지 사찰받을 것을 촉구, ② 남북한 총리회담 조기 재개, ③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촉구, 남한 단독가입시 지지 의사 등이 그것이다.

‘관할권 문제’ 협의에서 전 대표가 “우리의 주권은 조선반도의 반에만 미치고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사실상 한반도 2개의 정부를 처음으로 인정한 셈이 되었으며, 보상문제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은혜 사건’에 대한 일본측의 사실 확인 발언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강한 반발을 보이며 차기회담일정도 결정하지 못하고 회담이 결렬되었다.

3차 교섭이 끝난 후, 북한은 종래의 입장을 바꾸어 1991년 5월 27일 유엔에 가입하기로 공식 발표하였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에 핵안전협정 체결을 위한 협정문안 협상을 재개하자고 통보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변화는 일본이 제시한 수교 협상의 전제조건 3가지 중 남북한간 대화를 제외한 2가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되었다.

3차 회담이 결렬된 후, 수교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국 관리들이 상호 방문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1991년 6월 30일에 북한 노동당 국제부 손일호 일본과장과 김일성 전담 통역 황신철이 방일하여 가네마루 자민당 의원과 다나베 사회당 의원을 접촉하고, 또 외무성 다니노(谷野作太郎) 아시아 국장을 만나 8월 중에 수교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7월에 북한이 남

북한 고위급회담을 8월 말에 열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이 3차 회담에서 제시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다. 핵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이 남북한 상호사찰을 주장하고 미국도 북한의 핵의혹 완전불식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였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다.

제3차 교섭이후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조선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회(會)」 등 진보측에서는 일본정부에 대해 국교교섭을 조속히 재개하여 주기를 요구하였다.¹⁸⁾

다나베 위원장은 6월 11일 가이후 수상을 방문하여 북한이 유엔과 핵사찰협정교섭을 재개하려는 용의가 있으니 수교회담의 조기타결을 위해서 일본측이 성실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¹⁹⁾ 친북성향의 평론가인 나카가와(中川信夫)는 「아사히신문」의 논단을 통하여 일본정부의 대북한 교섭자세를 비판하였는데, 이는 조선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가해자인 일본이 책임청산을 하지 않는다는 조총련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²⁰⁾

제4차(1991.8.30~9.2) 국교정상화 회담은 북경에서 열렸다. 의제는 북한의 한반도 관할권 범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청구권, 핵사찰, 남북대화, 일본인 처 고향방문 등이었다. 북측은 ‘조선은 하나’이나 유감스럽게도 북반부 밖에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한국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며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였다. 또한 전후보상도 미국과의 문제로 일본과는 무관하며 사안별로 국교수립 전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측은 군사분계선(휴전선) 이남에는 주권이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보상은 거부하였고 재산청구권은 인정하였으며, 핵사찰 협정체결 후 조기비준 및 조기개최를 요구하였다. 양국은 30일 이른해 신원확인문제로 의견이 엇

18) 山本剛士, “日・朝政府間交渉への視點,” 『世界』 (1990. 10).

19) 『조선일보』, 1991. 6. 13

20) 『朝日新聞』, 1991. 6. 11

갈려 본격적 논의를 못하였다. 31일 이은혜 문제는 수교협상과 분리하여 협의기로 타협하였으며 9월 1일에는 북한의 관할권을 휴전선 이북으로 하자는 데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5차와 6차 회담은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제7차(1992.5.13~15) 국교정상화 회담은 북경에서 열렸는데 양측은 수교회담의 3대 의제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유효성 문제, 한일회담의 정합성 문제 등에 이견차를 보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유효성 문제는 기본문제의 해방과 독립의 유권 해석인데, 북한은 조선인민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여 제2차 대전에서 연합군과 힘을 합쳐 일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해방과 독립을 찾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조선이 분리 독립했으며 조선과 전쟁사태에 있었던 시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교회담의 3대 의제는 ① 기본문제: 과거조약의 효력에 관한 해석과 지배권 추구 포기조항문제, ② 경제문제: 보상문제, ③ 국제문제: 핵문제, 남북관계, 이은혜 문제 등이었다. 북측은 ① 한일합방은 무효이고, ② 중군위안부문제를 더욱 확대,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③ IAEA 핵사찰 적극 수용, 남북한 상호핵사찰 합의로 더 이상 핵문제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8차 회담은 1992년 11월 5일 열렸으나, 북한은 이은혜 문제의 재론은 하지 않겠다며 퇴장하여 회담은 결렬되었다.

8차에 걸친 일·북한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교섭 중단은 표면적으로는 이은혜 문제를 계기로 하고 있었다.²¹⁾ 그러나 일·북한 교섭

21) 일본은 북한이 반발하는 이은혜 문제를 일·북 수교교섭에서 제기하여 교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제3차 및 8차 회담에서 일본측이 재차 이은혜 문제를 제기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東京新聞』, 1991. 12. 30.

중단의 실질적 원인은 북한의 핵사찰 문제에 있었다.²²⁾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핵개발 의혹이 있는 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전제로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일본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북한의 핵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일·북한 수교교섭은 진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제1차 수교회담)²³⁾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북한 자신의 공식적인 입장은 핵개발 능력도, 의사도 없으며 핵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미군 핵과 동시에 사찰이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이었다.(제1차 및 제2차 수교회담)²⁴⁾ 또한 북한측은 북한의 핵문제가 미·북 간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제1차 수교회담) 일·북 수교교섭보다는 미·북 관계에서 해결을 모색하였다. 미국은 1991년 8월 미·일 양국 정부간 협의에서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조인할 것으로 예측하고 다시금 강도를 높여 북한에게 핵재처리시설을 폐기시키기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와타나베 일본 외무장관은 1991년 11월 14일 “핵재처리시설이 있다면 그것을 파기하지 않으면 국교정상화는 어렵다”고 언급하여 핵재처리시설의 폐기를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것을 강조하였으며,²⁵⁾ 제5차 수교교섭(1991.11.18~20)의 기조연설에서 일본측은 연료재처리시설에 대해 “우리 나라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밝히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²⁶⁾

8차에 걸친 회담은 외무성과 보수파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일·북

22) 小此木政夫, “日朝國交交渉と日本の役割,” 小此木政夫 編, 『ポスト冷戦の朝鮮半島』(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94). p. 266.

23) 『朝日新聞』, 1991. 2. 2.

24) 『朝日新聞』, 1991. 2. 2, 3. 13.

25) 『朝日新聞』, 1991. 11. 15.

26) 『朝日新聞』, 1991, 11. 20.

간의 합의된 의제에 대한 실무회담이었다.

1993년(북한의 NPT 탈퇴선언, 1993.3.12)부터 1994년까지 핵위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무책임한 정치공방이 계속되었고, 정치가는 대화로서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말뿐이었다. 호소가와 정권의 각료에는 외교정책의 무경험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위기관리는 전부 관료가 맡았기 때문에 ‘정공관보’(政空官補)라는 단어가 유행하였다.²⁷⁾

다. 제네바 회담 타결(1994. 10) 및 일본의 대북 쌀지원(1995. 6)

1994년 10월 21일 미·북 간의 핵교섭이 타결(제네바 회담)되자, 일본의 연립여당 3당 대표단이 1995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방북하여 북·일 수교교섭의 전제없는 재개에 합의하였다. 1990년 9월 28일 합의된 3당 공동선언의 해석문제는 1995년 3월 12일 북한측이 3당 연립정당의 방북 초청장을 보내면서 “전후 45년 간의 배상을 명기한 1990년의 3당 공동선언의 논의를 보류한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측에 의해 일단락 지워졌다.²⁸⁾

협상재개에는 무라야마 총리가 북·일수교를 이끈 사회당 출신이라는 점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3당 대표단은 와타나베 전 부총리 겸 외상을 단장으로 하는 자민당 대표단, 구보(久保) 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당 대표단, 하토야마 대표간사를 단장으로 하는 신당 사키가케 대표단으로 구성되었다. 북한 노동당의 김용순 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27) 小川彰, “安全保障政策のアクターと意思決定過程, 1991~98,” 外交政策決定要因研究會編(主査) 橋本光平, 『日本の外交政策決定要因』(東京: PHP 研究所, 1999), pp. 152~153.

28) 『毎日新聞』, 1995. 3. 12.

대표단과 회담하여 일·북 회담재개를 위한 합의서를 발표하였다. 일본측은 3당 대표가 회담을 주재하였으나, 실질적인 협상은 자민당 정조회장인 가토고이치가 주도하였다.²⁹⁾

일본의 연립여당대표와 북한노동당 사이에 조인된 「북·일 협상재개를 위한 4당 합의서」(1995.3.30)에는 1990년 3당 공동선언에 의해 국교정상화 협상이 시작됐다고 명기한 뒤 ① 조기 국교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② 대화와 협상에 조건을 달지 않을 것, ③ 자주적, 독자적 입장에서 협상할 것, ④ 정부가 협상을 적극 추진할 것 등의 4항목의 원칙이 합의되었는데 3당 공동선언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일본 내의 논의가 조정된 것이 아니라 유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³⁰⁾

1995년 5월 26일 북한의 이성록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은 일본을 방문하여 연립여당 3당의 북한 방문단의 단장이었던 외타나베 전 부총리와 회담하고, 북한의 식량난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쌀 원조를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대해서 무라야마 수상은 연립여당은 정부와 협의하여 협력하겠다고 표명하였다.³¹⁾

일본 정부는 6월 22일 무라야마 수장과 관계각료가 협의하여 북한에 대한 쌀지원을 정식으로 결정하였다. 6월 23일 이종혁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측과 협의에 들어갔다.

일본측의 협상창구는 식량청³²⁾이었으며, 북한측의 협상창구는

29) 서동만, “북·일 관계의 현황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1998. 10. 7), pp. 3~4.

30) 『朝日新聞』, 1995. 3. 30.

31) 한국은 먼저 대북식량지원을 하여야 한다면서, 6월 21일 15만 톤의 쌀을 무상제공하는 내용의 합의서(차관급회담)에 서명하였다.

32) 쌀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일·북 조정역의 중심인물은 자민당 정조회장인 가토고이치(加藤纘一)였다. 田中明, “北朝鮮コメ援助は平和ボ

국제무역촉진위원회였다. 양측은 7월 1일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계약의 주 내용에는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유상 15만 톤, 무상 15만 톤, 합계 30만 톤의 쌀을 공여하며, 공급받은 쌀은 전부 민생용 소비를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농협은 京都府 농협중앙회의 中川泰廣 회장(八木町 농협조합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협사절단을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방북시켜서 북한의 송호경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실무회담을 실시하였다. 그 후 북한은 쌀의 추가지원을 요청하였다. 일본 정부는 10월 3일 20만 톤의 쌀을 10년 거치, 30년 연불방식으로 추가 제공하였다.

1996년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는 국내의 남아 도는 쌀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원조에 적극적이었다. 이 당시 4년 연속의 풍작으로 정부미의 재고는 약 280만 톤으로 적정수준의 2배였다. 150만 톤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연간 210억 엔이 소요되었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쌀재고 처리를 위해 농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농협과 자민당의 '농림족' 의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나카가와는 자민당의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정조회장(京都2區 선출)의 직계였다. 노나카와 같이 수교교섭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가토고이치(加藤纘一) 간사장은 자민당 농림족의 중진이었다.³³⁾ 일본 정부의 대북 쌀원조는 농협의 과잉미 처리를 위한 유력한 수단이었다.

쌀지원협상에서 연립여당의 간부들은 북한이 100만 톤의 식량지원을 요구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쌀을 지원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임하는 정부관리(식량청, 외무성 등)들의 의

ケ,” 『諸君』 (1995. 9), p. 72.

33) 土門剛, “コメ大過剩時代,” 『世界』 (1997. 10), pp. 157~159.

사(특히 외무성)에 의하여 30만 톤에 머무르고 말았다.³⁴⁾ 이러한 사실은 일본 정국의 불안정과 함께 무라야마 연립정권에 취약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 당시 상황은 보수파³⁵⁾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는데, 한국과 미국이 보수파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고, 연립내각들이 선거제도 개혁과 정계개편 그리고 경제위기 해소 등의 국내문제를 우선시 하고 있었으며, 연립정부 내에 정책조정능력 및 거물정치인이 없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보수적인 외무성의 입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립 3여당의 무라야마 총리를 배출한 일본 사회당은 북·일 협상에서도 대북 온건정책을 주장했다. 하지만 사회당 자신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참가하게 되자, 개인차원이나 정당차원에서는 계속 친북적인 자세를 견지하였지만 정부·여당 차원에서는 과거 자민당의 보수주의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러면 왜 사회당은 보수노선을 계승했는가? 첫째, 일본은 국가 외교차원에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초당파 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사회당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지만 정부내 정치에서 타협했거나 패배했다는 것이다.³⁶⁾

34) 한영구, “일·북한 수교문제의 현재와 미래,” 『국제문제』 (1995. 8), pp. 35~42.

35) 이 당시 온건파는 무라야마 총리와 다케무라(武村) 대장상(신당 사키카케 당수) 등이었으며, 보수파(강경파)는 자민당의 다마자와(玉澤) 방위청 장관과 가메이시즈카(龜井靜香) 운수상 등이다.

36) 전동진, “김정일 체제 등장과 일·북한 관계개선 전망,” 『통일연구논총』, 3권 2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111~131. 1994년 12월 10일 9개 정파를 통합한 新進黨(오자와가 주축)이 등장하자, 자민당은 연내에 파벌해체를 결의했고 사회당은 구보 와타루와 야마하나(山花)의 사회당 우파(新進黨 聯合)가 중심이 되어 社民리버럴이라는 제3의 정치세력을 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

라. 수교교섭의 교착화

1996년 4월 17일 미국과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시아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방위협력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관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일 신안보공동선언」(미·일 양국민에게 주는 메시지 - 21세기를 위한 동맹)을 채택하였다.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의 주 내용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문제이었으며, 초점은 대만해협 및 한반도 유사시의 분쟁으로서 미·일과 북·중 간에 갈등을 유발시켰다.

1996년 9월에 한국에서 발생한 북한 잠수함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북·일관계에 진전이 없었다. 잠수함사건이 해결된 후 북·일간 교섭이 재개되었지만³⁷⁾ 1997년에 들어와서 북·일관계는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망명사건, 일본인 납치의혹사건, 각성제 밀수사건, 노동1호 미사일 재배치 및 추가배치사건 등으로 다시 교착상태에 봉착하였다.³⁸⁾

서 사회당 우파는 보수적인 정책을 수용하려 했다.

- 37) 1996년 6월 베이징에서 북·일 양국 외무성의 과장급 접촉이 공식적으로 개시되었고 잠수함사건으로 중단되기도 했으나 양국 창구는 유지되고 있었다.
- 38) 북·일 주요 현안을 교섭하기 위하여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일본을 방문(1997. 1. 30~2. 11)하였으나, 그가 귀국 도중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망명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냉각되었고, 일·북관계도 소원한 관계가 되었다. 1997년 3월 12일에는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공작원 안명진이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대담에서 평양의 김정일정치군사대학에서 요코다 메구미를 목격(1988. 10)했다고 증언함에 따라 일본 열도가 발각 뒤집히는 소동이 일어났다. 1997년 4월 9일에는 북한 화물선 「지성 2호」가 각성제(70kg, 약 100억 달러)를 미야기현 호소시마(細島)항으로 밀반입시키려다 적발되었다. 4월 11일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북한이 일본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노동1호(중거리탄도미사일, 사정거리 1,300km)를 동해안에 3기 재배치하였고, 추가로

일본인 납치의혹사건으로 비난을 받아 온 북한이 한국에서 잠수함 침투사건(1996.9)을 일으키자 일본의 매스컴은 북한은 못 믿을 국가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아사히신문』은 1997년 1월 13일 사설에서 일본은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을 직시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관한 ‘일본주변 유사’, 즉 ‘한반도 유사’에 대한 유사법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산케이신문』은 북한의 납침 가능성에 대한 일본의 유사법체제를 마련하자고 촉구하였다.

하시모토 수상은 1996년 1월 25일 북한이 3차 쌀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인도적인 지원은 필요하나 수입쌀 재고도 없고, 한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절하였다.³⁹⁾ 하시모토는 보수성향의 인물이었으나 북한과 대화창구를 확보하기 위해 측근인 가토 고이치 간사장으로 하여금 대북외교를 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가토 채널은 제1야당 신진당(1994.12.10 결성) 당수인 오자와(小澤)의 반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자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핵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한다면서 북·일 수교 협상을 반대하였다.

일본인 납치에 대한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가족연락회』를 1997년 1월 결성한 후 1997년 3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대해 납치사건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또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신병을 북한에 요구하였다.⁴⁰⁾

하시모토 수상은 국내적으로 양당의 비협조, 일본인 납치에 대한

7기를 더 배치한다고 보도하였다.

39) 『朝日新聞』, 1996. 1. 26.

40) 加賀孝英, 笹川陽平, “金正日への衝撃密書”, 『文藝春秋』 (1998. 6), p. 139; 피해자가족연락회 회장은 横田めぐみの 부친인 横田滋씨가 선출되었다.

피해자 가족들의 진정 및 매스미디어의 북한 비판에 의한 여론의 악화, 그리고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문제로 인하여 그가 시도하려던 북·일교섭은 교착상태에 봉착하였다.

마. 일본인 처 귀향합의(1997. 9) 및 납치문제 부각

한국의 잠수함사건(1996.9) 이후 납치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일·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계의 사사가와 요헤이(笹川陽平) 일본재단(舊日本船舶振興會) 이사장이 1997년 6월 하순 방북하여 장성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조직)부장(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의 남편)과 만나서 일본인 처 귀향에 합의하였다.⁴¹⁾ 또한 1997년 8월 21일에는 베이징에서 심의관급의 실무회담이 성사되었는데, 각성제 의혹사건, 식량지원문제, 일본인 처 귀향문제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납치사건은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⁴²⁾

이 합의에 의하여 베이징에서 1997년 9월 9일 열린 북·일 적십자사 연락협의회에서는 북한에 있는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1997년 11월 8일 북한에 있는 일본인 처(1,831명) 중 제1진 15명이 일본을 방문하였고, 제2진 12명이 1998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일본에 도착하였다.⁴³⁾

41) 사사가와가 방북할 때 중국, 북한과 무역업을 하는 오사카의 실업인 A씨와 동행하였다(A씨의 부친은 20여년 전의 關西지방의 제일조선인 회장을 역임). 이 A씨가 하시모도, 다케시다, 무라야마 3인 중(누구 것인지는 모르나) 1명의 친서를 김정일에게 비밀리에 전하였다. 일본인 처 귀향의 합의는 일본이 이 합의의 대가로 식량제공을 한다는 밀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加賀孝英, 笹川陽平, “金正日への衝撃密書,” 『文藝春秋』(1998. 6), pp. 138, 142, 143.

42) 『朝日新聞』, 1997. 8. 22.

43) 일본 각료회의는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을 계기로 1997년 10월 9일 2,700만 달러의 대북한 식량지원을 결정하였다. 당초 일본내 반복한

1차 일본인 처 귀향에 맞추어 1997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자민당의 모리 요시로 총무회장, 노나카 히로무 간사장 대리, 사민당의 이토 시게루 정조회장 등 자민, 사민 사키가케의 연립 3당 대표단이 방북하였다.⁴⁴⁾ 회담은 3개 항에 합의를 도출하였는데, 첫째 수교교섭의 조속한 재개, 둘째, 인도적 문제의 해결, 셋째, 인적 교류의 시행 등이었다. 인도적 문제 해결은 납치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며, 북한은 “일본측의 간절한 제의에 대해 일반 행방불명자들과 함께 조사는 해 볼 수 있다”라는 유연성을 보였다.⁴⁵⁾

연립 3당 대표단이 이러한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여론의 반복 정서는 가라앉지를 았았으며, 일본인 처 귀향문제는 오히려 납치사건을 더욱 부각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일본인 납치에 대한 ‘피해자가족’과 인권단체들은 1999년 3월 3일 오부치총리를 방문하여 125만 명의 서명서를 전달하고, 납치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다. 또한 그들은 5월 2일 동경에서 「북한납치 일본인 구출대회」를 열고 일본정부에 진상규명과 구출을 요구하고, 유엔인권위원회에 인권구제를 신청하기로 결의하였다.

1998년 3월 28일 납치 議連의 회장인 나카야마 마사아키(中山正暉) 전 우정성 장관(당시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자민당 방북단이 평양에 도착하여 김용순 노동당 비서, 김양건 부부장 등과 북한

정서를 완화시키고 수교교섭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일본인 처 귀향은 일본내 반복한 분위기를 전혀 누그러뜨리지 못하였다. 일본은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600만 달러의 간접적인 식량원조에 그치게 되었고 직접적인 원조를 거부하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44) 『朝日新聞』, 1997. 11. 11.

45) 『朝日新聞』, 1997. 11. 15. 북한이 이러한 유연성을 보인 것은 다급한 식량사정 때문이었다.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의혹문제, 보상방안, ‘요도호’ 납치범 귀국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납치사건 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해결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의하여 합의를 이뤘다. 당시 자민당 내에서는 온건과 성향의 의원이 방북해서 납치문제에 대해 회담을 해도 일본 내에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반북 성향의 강경파인 나카야마 단장을 방북시키면 일본의 움직임, 즉 여론을 다소 호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납치의원연맹의 회장인 나카야마를 방북시켰다.⁴⁶⁾ 그러나 귀국 직후 외무성과 자민당내 강경파의 비판에 부딪쳐 이 제안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⁴⁷⁾

일본측이 납치문제를 수교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는 것은 자민당이 국민여론의 악화로 더 이상 수교교섭을 서두를 계획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또 외무성은 해외에서 자국민 보호에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었다.⁴⁸⁾

당시 하시모토 총리가 1998년 7월 12일 실시한 참의원 선거(총 252명 중 1/2인 126명 재선)에서 자민당이 참패⁴⁹⁾함으로써 사임하고, 7월 30일 오부치(小淵)를 신임총리로 선출하였다.

자민당 참의원 선거 참패의 이유는 7년이나 지속되어 온 경기침

46) 加賀孝英, 笹川陽平, “金正日への衝撃密書,” pp. 142~143.

47) 일본은 당시(1997. 11) 일본 방북대표단이 왔을 때에 쌀지원과 일·북 정상화 교섭을 약속할 예정이었지만 그 계획이 수정되었다. 그 이유는 일본 외무성이 1997년 말부터 국교정상화 교섭의 무조건 재개 방침을 바꾸어 납치의혹의 진전이 없는 한 교섭은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시게무라, “일·북 국교정상화의 전망,” p. 4.

48) 위의 글, p. 34.

49) 자민당은 44석(지역구 30석, 비례구에서 14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非改選의석 58석을 포함, 총 102석으로 과반수(12석)에 25석이나 미달하게 되었고, 제1야당 민국당은 改選의석(18석)을 대폭 상회하는 27석을 획득하였다.

체 등 전후 최악의 불황(부실채권 등 금융대책 미흡)으로 하시모토의 자민당 정권에 대해 국민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오부치의 자민당은 국내 경제위기 해소에 전념을 해야 하는 상황 이었고, 북·일수교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감내할 세력도 부재하였다. 북·일관계 창구인 노나카 히로무 관방장관이 북한에 대한 반발의 격화로 관망하는 자세를 보여 오부치 내각의 대북채널은 공백상태를 맞고 있었다.⁵⁰⁾

북한은 일본이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는 납치사건을 인정할 수 없는 문제이었기 때문에 교섭은 진전될 수 없었다. 따라서 1998년 6월 북한은 납치사건 조사의 종결을 선언하였으며, 양국의 수교교섭은 단절되었다.

바. 대포동 발사문제 타결(1999. 9)과 9차 수교교섭 재개(2000. 4)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전역미사일방위」(TMD)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기로 합의하고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개선비용 291억 엔을 2000년 방위예산으로 배정했다.⁵¹⁾

1999년 들어서서 일본인 납치의혹사건과 3월의 북한공작선의 일본영해침투사건, 그리고 7월과 8월의 북한 미사일 시험 재발사 움직임 등으로 일본과 북한관계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였다.⁵²⁾ 북

50) 오부치 내각의 2인자인 노나카는 1990년 3당 합의에 참가한 이래로 계속해서 대북수교에 관여하고 있었다.

51) 『朝日新聞』, 1999. 8. 25.

52)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은 일본의 여론을 최악의 상태로 몰았고 조총련계 상공인들도 대북투자를 주저하게 되었으며 조총련계 제일 동포들도 북한에 대해서 북만을 표출하였다. 배정호,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실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9).

한은 일본에 대해 ‘접근과 미사일 협박’이라는 이중전략을 전개하고 있고, 일본은 북한에 대하여 한·미·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화 와 억지’ 전략을 추구하였다.⁵³⁾

북한과 미국은 1999년 9월 12일 베를린 고위급회담에서 대포동 미사일 발사 유예와 경제제재 해제 및 식량지원을 맞바꾸는 타협안에 합의했다.⁵⁴⁾ 따라서 1999년 6월 미·북 베이징 고위급회담 이후 계속되어 온 북한의 미사일 위기는 일단락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사일 발사문제의 타결은 북·일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가장 예민하게 대처해 온 일본은 베를린 회담 결과에 한숨을 돌리면서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취했던 식량지원 중단, 수교회담 중단, 전세기운항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수교교섭을 추진하였다.⁵⁵⁾

평양을 방문한 일본의 초당파 의원 대표단(단장: 무라야마 전 수상)이 북한 노동당의 김용순 비서와 북·일 수교협상의 재개에 합의

53) 배정호, “탈냉전기 북·일관계의 변천과 일본의 대북한 ‘대화 와 억지’ 정책,”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1999), p. 117.

54) 베를린 합의는 한마디로 한국의 포용정책을 한·미·일 3국이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결과이다. 합의의 바탕은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이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금창리협상은 사실 미·북간의 몫이었다. 그러나 햇볕정책이 햇볕아닌 바람이었다면 북한이 미국만 믿고 벼랑끝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았을 것이다. 미사일 위기 해결에 북한의 군사적인 고려가 있었다면 그것은 서해해전의 패배가 아니라 극동미군의 공격능력일 것이다. 동시에 미국도 가능한 한 최대의 당근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55)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외상은 북·일 전세기 운항 중단을 전부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朝日新聞』, 1999. 12. 7. 일·북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외교당국자간 비밀접촉(10. 18~20)을 가졌고, 일본정부는 일·북간의 전세기 운항의 동결조치를 해제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1999.12.3)함에 따라 1992년 11월 이후 중단됐던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이 다시 열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맞게 되었다.⁵⁶⁾

12월 3일 일본과 북한의 정당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의 기본성격은 일본 정치인과 북한 노동당 대일(對日)관계 책임자가 서명한 문서란 점에 나타난다. 무라야마 전 총리가 이끄는 초당파 방북단과 북한 노동당 김용순 비서가 서명한 공동성명은 일·북 정부간 접촉이 아니라 정부간 회담의 전 단계로 이루어진 비당사자간 접촉의 결과이다. 지난 1990년에도 자민당·사회당이 북한 노동당과 식민지배 사죄, 보상 등을 담은 「3당 공동선언」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자민당내 강경파와 외무성 등 행정부의 비판과 갖은 논란 끝에 1996년 폐기되었다. 김일성도 지난 1992년 일본 재단이사장 사사카와 요헤이(笹川陽平)와 만난 자리에서 “(관료국가) 일본의 정책결정 과정과 외교적 지식에 무지했으며, 3당 공동선언은 커다란 착각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⁵⁷⁾

그러나 당시 공동성명은 내용이 진전됐고, 양국간 접촉이 눈에 띄게 진전된 분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코 경시할 수 없었다.

일본은 그간 일본인 납치사건 조사, 마약 위조달리 등 제조·수출 금지, 대한항공 폭파범 김연희에게 일본말을 가르쳤다는 이은혜 문제, 북송 일본인 처 귀향, 핵·미사일개발 의혹 해소 등을 교섭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중 일본인 납치, 일본인 처 고향방문 등은 ‘인도적 문제’로 집약된다.

양측은 당시 성명에서 인도적 문제를 양국 정부가 아닌 적십자사를 통해 해결할 것으로 합의했다. 북한으로서는 ‘국가범죄’에 대한

56) 『讀賣新聞』, 1999. 12. 3.

57) 加賀孝英·笹川陽平, “金正日への衝撃密書,” p. 143; 『조선일보』, 1999. 12. 4.

수사주체를 적십자란 민간조직으로 격하시켜 만족하였으며, 북한과 수교가 '외교목표' 중 하나인 일본정부도 대국민 설득이 용이해진 셈이었다.⁵⁸⁾

일본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그러나 이 성명에서 언급되지 않은 현안이 바로 핵·미사일 의혹 해소였다. 일본 정부는 이를 의식, 12월 2일 아오키 미키오(青木幹雄) 관방장관에게 “북한의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를 포함한 현안들이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협상을 추진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으로 믿는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했다. 결국 전에 없이 협상의 성공가능성은 높지만 일본 정부가 핵·미사일 문제를 미·북 협상에 맡길 것인지 아닐지에 따라 회담의 향배는 결정될 전망이다.

일본 언론들은 “의원 방북단이 미사일 재발사 금지 등 일본 정부가 회담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문제를 묵살했다”며 비관적으로 전망했다.⁵⁹⁾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나온 이번 합의가 진정한 관계발전으로 이루어질지는 불분명하다”고 논평했다.

일본 적십자사 부사장, 고노에(近衛忠輝)와 북한 적십자사회 중앙위원회 부회장인 하해룡은 2000년 3월 13일 베이징에서 2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였다. 북한측은 일본인 납치의혹문제에 대해 1999년 12월 1차 적십자회담에서 “해당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당시 회담에서는 “조사를 시작했다”고 표명하여 다소 진전을 보였으며, 일본인 처 고향방문도 4월경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측은 이 날 북한측에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쌀 10만 톤을 지원하기로 공식 통보하였다.⁶⁰⁾

58) 북한이 과거와 달리 태도변화를 보이고 수교재개를 서두르는 이유는 식량난 등 경제적 요인 때문이다.

59) 『朝日新聞』, 1999. 12. 3.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낸 것은 무엇보다 쌀이었다. 북한은 1999년 12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이끄는 초당파 의원단이 찾아갔을 때부터 식량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문제, 대포동 미사일 발사, 피선박 영해침범 등으로 북한에 대한 일본 국민의 감정이 나빠진 시점에서 일본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결국 예비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일본 정부는 마침내 쌀을 건네 주고 협상의 끈을 이어가면서 최대 현안인 일본인 납치문제를 풀어가기로 전환했다.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일본은 1995년 쌀 50만톤, 1996년 600만 달러어치의 쌀과 의약품, 1997년 쌀 6만 7,000톤을 북한에 지원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는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⁶¹⁾

오자와 자유당 당수는 북·일수교 문제에 대해서, 수교교섭 이야기가 나오면 일본은 물자와 자금을 원조하느니 마느니 이야기만 하고, 어떠한 전략과 사고로 북한과 협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서 토론과 결론이 생략된 일본의 대북교섭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⁶²⁾

고노 요헤이 일본 외상은 2000년 3월 7일 일본의 대북수교 기본입장에 대해 한국·미국과 연계해 서로 상의해 가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⁶³⁾ 방위연구소는 한반도 등의 군사정세를 분석한 『동아시아 전략개관 2000』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시 동결했지만 미사일 개발·배치를 자제하려는 자세

60) 『朝日新聞』, 2000. 3. 14.

61) 일본의 정부미가 남아도는 것도 식량지원과 무관하지 않다. 적정비축량(약 165만 톤)을 크게 웃도는 255만 톤의 쌀을 보관하는 데 연간 수익 달러가 든다고 한다.

62) 『조선일보』, 2000. 2. 13.

63) 『조선일보』, 2000. 3. 7.

는 아니다”면서 “김정일체제 존속에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미사일·핵 카드를 버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⁶⁴⁾ 이는 방위청이 일·북 수교교섭에서 핵·미사일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일본과 북한의 9차 수교교섭 본 회담이 2000년 4월 4일에서 8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1991년 1월에서 1992년 11월까지 8차 회담이 이은혜 문제로 결렬된 후 7년 5개월만에 재개되었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한 채 첫날 회담을 끝냈다. 이 날 회담에서 북한은 일본측에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반면 일본은 배상은 곤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중단, 일본인 납치의혹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북한측 대표인 정태화 외무성 순회대사는 회담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과거사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담을 더 이상 계속할 근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회담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시사했다.

일본 대표인 다카노 고지로(高野幸二郎) 대북담당 대사는 이에 대해 일본과 북한은 식민통치기간중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일본이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북한에 배상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일본의 한 관리가 전했다.

양측은 쌍방간에 수많은 문제가 있으나 협상을 진척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다짐하면서 9차 회담을 끝냈다. 이 회담은 별 성과 없이 끝났으며, 양측은 실무적 탐색전 성격을 띄고 임했다고 볼 수 있다.

주변 정세가 크게 바뀌어 양측의 교섭 마당에는 특별한 걸림돌이

64) 『朝日新聞』, 2000. 3. 8.

없었다. 북·미 대화의 진전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대화 자세 등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데다 현안도 대체로 정리됐다.

물론 현재도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포기가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 못박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 문제는 일본과 협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이 자신의 생존 즉 체제유지를 보장받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외협상카드인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없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지원이 북한의 핵·미사일개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른바 ‘일본인 납치 문제’는 그 동안의 물밑 접촉과 예비회담에서 큰 틀이 정리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보상문제는 북한의 ‘전쟁 배상’ 및 ‘전후 보상’ 요구가 핵심이다. 일본은 북한의 교전 당사국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후 보상 요구도 무시할 방침이다. 다만 청구권 협상을 통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은 행한다는 입장이다. 역사 사죄·반성의 명문화를 둘러싼 논쟁도 뜨거울 전망이다.

2000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 10차 본 회담이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북한측의 요구에 따라 6월 12일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무기 연기되었다. 6월 15일 고노 요헤이 일본 외상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문이 열렸다”면서 북·일수교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Ⅲ.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1.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가. 미·일동맹의 강화요인

(1) 군사적 보통국가론의 확산

1989년 냉전이 붕괴됨에 따라 미국의 군사적인 개입이 약해지는 반면, 일본 경제력의 세계화로 인해 그 이해관계도 광범위해졌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기대도 한층 커졌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국제공헌론이 기세를 올리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소련거구 비례대표병립제에서도 보수 양당제의 출현이 예상되어짐에 따라 정계재편성 이후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은 큰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일본의 기존 보수적 현실주의자들은 안보정책에 있어서 외교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이들은 안보정책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자위를 중시하고, 집단적인 안전보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미·일 안보체제는 위헌이 아니며 최소한의 개별적인 자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급격한 군사력의 강화와 군사적인 국제공헌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국제연합을 통한 보편적인 안전보장을 인정하고 있다.

1990년대 일본의 안보논쟁을 촉발시킨 주역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로서, 그는 냉전종식을 계기로 일본이 소극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탈피하여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안보역할, 즉

PKO 등의 국제적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오자와는 기존의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경무장 경제우선주의 노선은 역할이 종식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오자와의 저서 『일본개조계획』(1993)은 1994년 2월 말까지 64만 부가 팔려 오자와 붐을 형성하였다.⁶⁵⁾

오자와 붐은 북한 핵문제, 노동1호 발사실험 그리고 경제난 심화를 계기로 북한장래와 한반도 유사에 대한 불안심리와 맞물려서 이루어졌다. 그는 국제연합군에의 자위대 참가가 일본의 현행 헌법, 미·일 안보조약, 유엔헌장의 틀 속에서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헌법의 개정보다는 헌법의 해석에 의해 현실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측면에서 오자와류(流)의 현실주의자는 군사적인 국제공헌에도 적극적이다. 물론 자위대를 강화한다고 할지라도 양적인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질적인 확대를 지향하는 것이다. 육상자위대의 정원도 감원하고 고도의 정보화된 장비의 도입을 통하여 질을 높이는 것이다.

오자와의 구상은 국제공헌에 군사적 역할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수주의자와 다르지만 국제연합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의 차이점은 그 당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인가의 문제이다. 오자와는 유엔헌장 제7장에 기초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행해지는 행동은 전부 집단안전보장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데 비해 정부는 유엔군의 활동만이 집단안전보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이 유엔군에 참가할 수 있으나 없느냐는 유엔군의 성격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유엔군의 임무가 무력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일본은 참가할 수 없다는 기존의 현실주의자의 입

65)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東京: 講談社, 1993).

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 당시 기존의 보수주의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민당의 온건파이며 오자와의 대항세력인 가이후(海部) 수상의 집권시기였으며, 그가 일본의 인적(人的)인 공헌에 대해서는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안된 PKO 협력법안은 1년 이상의 진통을 겪고 1992년 6월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PKO 협력법안은 평화유지 활동과 인도적인 차원에 국한되었다. 이 법안 하에서 자위대의 임무는 의료, 수송, 건설 등을 포함한 후방지원 업무에 한정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안보논쟁은 신방위대강(1995.11)이 책정되기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초로 발표된 보고서(1994.8)는 호소가와 수상의 사적 자문기구에서 작성한 방위문제간담회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방위대강을 작성하기 위한 중간 검토결과로 발표되었다.⁶⁶⁾

이 보고서의 특징은 국제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세계적, 지역적 규모의 안보협력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미·일 안전보장의 원활한 기능을 주장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필요최소한도의 방위력 정비 기준이 되고 있는 기반적 방위력 수준은 불변, 둘째, 해·공 자위대의 전투장비는 현 수준 유지, 셋째, 육상자위대의 현 정원(18만 명) 충원율을 고려, 15만 명 체제 유지, 넷째, 유사시 방위력 증강을 위한 예비자위관계도 확립, 다섯째, 불안정요인의 조기포착을 위한 정보수집능력 강화, 여섯째, 즉응태세 완비를 위한 기동력·수송력 강화, 일곱째, 북한·중국의 미사일에 대응 가능한 TMD 구상, 여덟째, 자위대의 원활한 국제공헌 활동을 보장하는 PKO 여건 정비인데, 이는

66) 『朝日新聞』, 1994. 8. 12.

유엔 하에서의 다각적 협력을 중시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자위대의 주요 업무로 하는 것과 평화유지군(PKF)를 포함한 PK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등이다.

이 보고서는 오자와의 구상과 유사성이 많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배경을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적으로는 1993년 비자민 8개 정파의 호소가와(일본신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오자와가 정치권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함에 따라 자위대 역할 확대론자들의 입지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자위대의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에 대하여 1991년 2월에는 찬성이 46%, 반대 38%인 데 비하여 1994년 1월에는 찬성이 48%, 반대가 31로 여론은 평화유지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었다.⁶⁷⁾

그리고 오자와 등 자위대 역할확대론자를 견제할 사회당과 같은 강력한 야당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사회당이 몰락한 것은 연립정권에 참여하여 헌법, 자위대, 미·일 안보 등과 관련한 기본노선을 전환시킴으로써 이념적으로 퇴색하였기 때문이다. 리버럴한 세력인 민주당이나 진보적 지식인 그룹이 강력한 여론의 지지아래 진행하고 있는 총체적 보수화 현상⁶⁸⁾을 저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67) 『世論調査年鑑』(東京: 日本總理部, 1991), p. 140; 『讀賣新聞』, 1994. 5. 16.

68)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는 국제 및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국내 정치변동, 경제의 침체 및 금융위기가 정체성의 위기로 이어졌고 이것이 일본인의 불안심리를 확산시키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1990년대 들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배경에는 자유주의 사관(史觀)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정계, 언론계가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일본의 우경화는 안보측면에서 자위대의 활동영역 확대와 맞물려 전개되었다.

방위간담회 보고서와 오자와 구상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는 국제적 요인으로는 1992년부터 북한이 미국의 핵사찰 요구에 대항하여 강경한 자세를 취하였고 1993년 5월에는 노동1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일이 북한을 맹렬히 비난하자 김일성 정권이 더욱 위협적 자세를 취한 것을 들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자국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나 유엔의 제재 조치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헌법의 범위 내에서 미국의 후방지원 허용여부, 유사입법 제정여부 등이 제기되었으며 자위대 역할확대론자들의 입장이 더욱 강화되었다.

방위간담회 보고서가 국제협력 또는 다자주의적 안보협력과 미·일 안보협력을 양축으로 작성된 데 대하여, 미국은 오자와 등의 영향력 확대가 미·일 동맹관계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미·일 안보협력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신방위대강의 입장으로 변경된 배경에는 나이(Nye) 이니셔티브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즉 방위간담회가 제시한 자립적인 방위지향이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하여 변화되었다.⁶⁹⁾

미국은 일본의 주변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인 미·일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중국의 군비증강 등 중국의 대두를 들어 일본을 설득하였다.⁷⁰⁾ 또 다른 견해는 일본이 미국의 경제력 약화에 따른 미국이탈 조짐으로 미국이 인식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⁷¹⁾

69) 船橋羊一, “日本安保再定義 全解部,” 『世界』 (1996. 5), pp. 22~53.

70) Mike Mochizuki ed., *Toward A True Alliance: Restructuring U.S.-Japan Security Relation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7), p. 12.

71) 佐佐木芳隆, 『新秩序への道: 多國間安保日米同盟』 (東京: 中央公論社, 1995), pp. 321~355. 오자와는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철수에 대비

따라서 오자와 등이 주장하는 자립적인 방위지향은 미국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신방위대강에서는 미·일 안보협력의 중시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2) 신방위대강의 策定

일본 군사력의 질적 향상과 국제적인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한 새 방위계획 대강(1995.11.28)은 군사대국을 지향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위력을 유지한다는 기존의 ‘기본적 방위력구상’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 미·일 안보체제의 유지·강화, ㉡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 ㉢ 자위대 규모 축소, ㉣ AWACS(조기경보기) 4대 도입 등 질적인 전략은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8년 구(舊)대강에서는 미·일 안보체제를 “일본에 대한 침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 그 역할을 자국 방위에 국한했었다. 그러나 신 대강에서는 “미·일 안보체제가 일본은 물론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전보장환경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라고 개정했다. 이는 미·일 안보체제의 틀 속에서 일본의 자국방위라는 소극적 역할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일 양국은 냉전 종결, 소련의 해체, 미·일경제의 역학관계 변화 등 미·일 안보체제를 둘러싼 냉전환경에 이어서 근본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선 러시아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상당기간 일본과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 새로운 안보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후의 미·일 안보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셉 나이 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는 최근 냉전종결 등의 전략환경의 변화와 함께 다자간 안보체제에 관한 미국의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독자적 노선을 다자간 안보의 틀 속에서 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⁷²⁾

미국으로서는 미·일 안보체제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라이벌인 일본을 활용할 수 있는 한편, 실질적인 문제로 미국이 일본내 기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음으로 미·일 안보 재조정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향후 일본은 주권국으로서 대외 정치·군사 활동에 대한 제약을 타파하려 할 것이며, 특히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에 합당한 국제적 역할과 영향력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미·일 안보체제에 대한 사고는 첫째, 미·일 동맹을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미·일 안보체제를 유지하되 지역주의와 유엔 중심을 강조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자주성을 넓혀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 대강의 내용 중 또 한가지 관심을 끄는 부분은 ‘다각적 안보’ 개념이다. 일본은 2000년부터 PKO를 비롯해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아시아지역포럼(ARF) 등의 회원 국가와 다각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한다는 이론 도입을 앞장서 주장해 왔다.

새 방위계획 대강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중전과 같이 인정하

72) Joseph Nye, "Coping with Japan," Foreign Policy 89 (Winter 1992~93), pp. 96~115.

지 않으면서도 PKO 참여, 대규모 재해와 테러에 대한 대응 등 일본의 국제적인 군사공헌 확대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 냉전구도의 붕괴에 따라 옛 소련의 위협을 삭제한 반면 한반도를 최대 위협요인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 유사 시 ‘미국과의 역할분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자와 등이 주장하는 논의들은 미·일 안보체제 강화라는 틀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미·일 안보협력 과정에서 전문적인 군사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방위청 등 군사전문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일본의 우경화 현상으로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나.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

(1) 미·일 신안보 협력지침

국제협조 또는 다각주의적인 안보협력과 미·일 안보협력을 양축으로 제시한 간담회의 보고서가 미·일 안보협력을 주되게 내세운 신대강의 입장으로 변경된 배경에는 미국의 영향, 좀더 구체적으로 나이(J. Nye) 국방차관보가 이끄는 그룹의 역할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한다.⁷³⁾

1995년 2월 28일에 작성된 나이 보고서의 특징은, 첫째, 이후 20년에 걸쳐 미국이 아시아에서 전방위능력으로 10만 규모의 미군 병력을 유지할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둘째, 이러한 방위능력의 유지와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미·일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셋째, 아시아-태평양의 다각적인 안전보장협력을 위해 대

73) 船橋洋一, “一米安保再定義の全解部,” 『世界』(1996. 5), pp. 22~53.

화의 촉진과 적극적인 의의를 정식으로 인정한 점이다. 미·일 안보 관계의 재정의 문제도 워싱턴의 일방적인 아니셔티브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와타나베가 설명하듯이 상호 작용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⁷⁴⁾

나이 아니셔티브가 일본 국내의 안보정책에 미친 영향으로는 군사적 현실주의자의 주장대로 자위대 역할을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그 배경으로는 우선 걸프전쟁을 지적할 수 있다. 국민은 일본이 얼마나 위기에 약한 시스템인가 통감하였다. 따라서 당초에는 PKO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에 비판적이었던 여론도 점점 지지를 보내게 되었다. 일본국민은 돈으로는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처럼 군사적 현실주의의 입장을 미·일안보 재정의의 과정에서 점점 확대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96년 4월 하시모토 수상과 클린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미·일 양국 국민에의 메시지: 21세기에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미·일안보가 극동의 범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신안보선언은 실질적인 안보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일 신안보선언 이후 자민당의 국방측 및 자위대의 간부들은 신대강이 평화시에서 유사시로 이행하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였고, 이 점을 보충하기 위해 신가이드라인을 작성하려고 하였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은 1996년 9월 19일 제1차 중간보고안,

74) 渡邊沼夫, “日米安全保障關係の新展開,” 『國際問題』 (1998. 3), pp. 24~25.

1997년 6월 8일 제2차 중간보고안, 1997년 9월 23일 최종보고안이 확정되었다. 제1차 중간보고안은 미·일간의 협력사항을 ① 평상시 협력, ② 일본이 무력침략을 당했을 경우의 대처방법, ③ 일본 주변지역 사태에 대한 협력이라는 데 합의하였다. 미·일은 최초로 극동이라는 범위를 일본 주변지역으로 확장시켰다.

제2차 중간보고안의 특징은 새로운 범위의 일본 주변의 유사시에 대비한 공해 및 상공에서 미국과 자위대의 실효성의 역점을 둔 폭넓은 6개 분야의 40개 항목을 검토하였다.⁷⁵⁾ 최종보고안은 1차 보고안에서 합의된 평상시 협력, 일본이 무력침략을 당했을 경우의 대처방법, 일본 주변유사에 대한 6개 분야의 40개 항목을 확정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 등이 첨가되었다.

최종 방위협력지침과 1978년 제정된 방위협력지침⁷⁶⁾을 비교해 보면 첫째, 평상시 협력은 침략미연방지인 데 반해 과거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자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방위력을 보유하고 미국에게 시설을 제공한다.

미국은 핵억지력을 보유하며 즉각 대응부대를 운용·지원하고 미·일은 침략에 대비하여 작전·정보분야에서 협력한다는 것이다. 최종 협력지침은 일본이 자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방위력을 갖는다. 미국은 핵억지력을 중심으로 아태지역에 배치한 병력을 유지한

75) 防衛協力小委員會, 『日本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の見直しに關する中間とりまとめ』(東京: 防衛廳. 1997), pp. 1~31.

76) 미·일은 1970년대 후반 소련의 극동 및 인도양에서 해군을 증강(1979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침공)하자 이러한 신 냉전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방위협력을 개시하였으며, 일본의 해상소송로전략을 추진하였다. 극동유사의 경우 첫째, 미 해군은 위협의 대상인 극동소련의 해·공군기지를 공격하고, 둘째,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지원하며 소련함대의 3해협 통과를 봉쇄한다는 전략이 포함되었고, 이러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다. 특히 정보교환과 정책협의를 위해 미·일 안보보장실무협의회(SSO)와 미·일 안전보장실무협의회(SSC)를 각각 설치한다. SCC는 미국 측에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측에서 외무장관과 방위청장관이 참가하며 SSC는 일본측에서 외무성 북미국장과 방위청 방위국장이, 미국 측에서 국무차관보와 국방차관보가 참가한다. 이 밖에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국제구호활동에 협력한다.

둘째, 일본이 무력침략을 당했을 경우, 즉 일본 유사시의 과거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한정적이며 소규모의 침략을 자위대로 격퇴하며, 자력으로 격퇴하기 어려우면 미군의 협력을 얻는다는 것이다. 최종 협력지침은 무력공격이 임박했을 경우 미·일간 조정기능을 신속히 시작한 뒤 합의에 따라 준비된 선택단계에 의거, 준비를 진행한다.

셋째, 일본 주변지역의 유사시 협력에 있어서 과거 협력지침은 극동지역에서 안전이 저해될 경우 미군의 병참지원에 대해 연구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합의했을 뿐 구체적 협력사항은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 지침은 난민구호·이송, 피난민에 대한 응급물자지원 등 인도적 조치와 일본주변해역에서의 수색 및 구난활동, 기뢰 제거·선박검사활동,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비협력에 있어서 미·일은 공동작전계획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력기준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괄메카니즘을 설치하고, 또한 유사시 백악관과 일본 총리공관을 잇는 핫라인이 연결되고 양국 수뇌부는 정보교환을 통해 사태의 확대를 막기 위한 조정 메카니즘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신방위협력지침의 가장 큰 특징을 첫째, 일본의 군사역할 범위를 확대,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유사시에도 자위대가 일정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둘째,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처하게 함은 물론, 셋째, 미

국과의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참여 명분을 주었다는 데 있다.

새 지침의 핵심골자는 한마디로 유사개념의 ‘중심이동’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양측은 최종합의서에 일본 주변 유사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는 1997년 6월 중간 보고 발표 이후 ‘일본주변유사’에 대만해협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크게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일 방위관계자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한반도와 대만해협 등을 주변유사지역으로 상정하고 있다.

일본 주변유사시에 대비한 인도주의 활동, 일본 주변지역 탐색·구조 등을 골자로 한 방위지침 최종안 6개 분야 40개 항목 중에서, 특히 피난민 구조·이송, 주한 일본인 철수, 기뢰 소해, 경제봉쇄 등에 따른 임검활동 등은 일본 함정과 군용기가 한국 영해·영공에 들어오는 근거가 돼 필연적으로 주권침해 논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마에다 전 방위연구소 실장은 신 지침의 성립은 미·일 안보조약의 전면개정과 같은 것이며, 이에 의해 일본은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⁷⁷⁾ 즉,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여 일본 국가가 그들의 미사일에 의해 공격받을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997년 방위백서가 기술한 정도의 북한의 위협이 일본주변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일본주변사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⁷⁸⁾

77) 前田壽夫, “カイトテイン 見直し=戦争への道,” 『軍縮問題資料』, (1997. 8) pp. 18~25.

78) 前田壽夫, “97年版防衛白書を問う:新カイトテインに向けて,” 『軍縮問題資料』, (1997. 11), pp. 38~45. 일본정부는 1997년도 연례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이 여전히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의 불안요소라고 지적하고 역내 안정된 안보환경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미·일 안보체제 강화노력과 긴급사태에 대비한 법제 정비추진 필요

(2) 주변사태법

1998년 4월 28일 각의에서 신가이드라인에 관련된 주변사태법안을 발의하였다. 관련법안은 일본 주변지역에서 유사(주변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진압행동에 나서는 미군에의 지원내용과 실시과정을 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평화적 진보주의자(신민당)는 “헌법문제 등에서 의문점이 많고, 여당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의 결정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주의자(자민당)는 “국내정치보다는 외교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민당의 저항을 무시하고 각의 결정을 추진하였다.⁷⁹⁾

주변사태법안의 비판은 주변사태의 개념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지역의 이미지를 없애면서 미군에 협력하기 위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투명한 후방지원에 대한 비판이다. 자위대의 수송협력의 장소가 되는 후방지역의 정의에 대해서도 “일본 영역 또는 전투행위가 행해지지 않고, 또한 활동기간 동안 전투행위가 행해질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과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후방지원의 개념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일본 정부는 유사시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사시 취할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주변사태법을 성립(1998.5)시켰으며, 미국과 협력범위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성을 강조하였다.

79) 『朝日新聞』, 1998. 4. 28.

다. 미·일동맹과 부시·고이즈미 정권

1999년 8월에 일본방위청은 동북아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 개발을 위한 미·일 공동기술연구를 개시하였다. 일본에서는 TMD가 해외미군을 방어할 목적으로 개발되는 미국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그 명칭 대신 중립적인 탄도미사일방어(BMD)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국가미사일방어(NMD), TMD 계획을 유일하게 지지하고 있다.

2001년 4월에 출범한 고이즈미 정부의 대외노선도 ‘21세기의 정치 대국화’ 대외정책 노선과 이를 위한 ‘지도력 분담’(power-sharing)을 지향한 미·일 동맹강화의 틀 내에서 추구될 것이므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전략 틀 및 철저한 검증을 통한 상호주의(대북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부시 정부는 일본의 헌법 9조 집단적 자위권 해석을 변경하면서라도 미사일방어(MD)계획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가 바람직하며 군사비 부담이 늘더라도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이 증대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일본 자위대의 방위전략이 옛 소련을 주적개념으로 한 ‘북방방위’에서 중국을 겨냥한 ‘남방방위’로 변화하였다. 일본 정부·자민당은 당초 2005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2년 앞당겨 작성하기로 한 데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 및 대만해협의 불안정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증가 등 급격한 정세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다.⁸⁰⁾ 일본은 자위대의 주력군을 북방에서 규슈·오키나와 등 남방지역으로 이동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국방예산을 전년도보다 17% 늘이는 등 군비확대를 지속하

80) 『日本經濟新聞』, 2001. 8. 6.

고 있다고 일본 방위백서(2001)는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새로운 방위계획은 부시 행정부의 중국 견제전략이나 일본 우익 세력의 중국위협론과 맞물린 것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방위계획에는 일본이 미국과 공동연구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계획이 구체화될 것에 대비, 육·해·공군 자위대에 중복되어 있는 지휘명령체계를 통합하고 조직·장비체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1) 9·11테러 관련 법안

미국의 테러 참사(2001.9.11) 이후 일본정부는 미국의 테러보복 공격을 자위대가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테러대책 특별법안’과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한 ‘자위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0.5)하여 통과(10.29)시켰다. 이 법률과 자위대는 자국내에 한정했던 자위대의 미군지원 활동을 타국영역으로까지 넓히게 되었으며, 무기와 탄약 등 전쟁과 직접 관련된 물자들도 수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무기사용범위도 본인의 관리하에 있는 사람의 보호까지로 확대하였다. 이 법은 2년 한시법이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사전 국회승인도 필요없다.⁸¹⁾ 고이즈미 총리는 2년 한시법인 이 법을 영구법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위대의 전쟁지원을 위한 해외파병 허용을 결국 지난 50년간 일본과 일본을 둘러싼 동아시아 전략질서의 기본 요소였던 평화헌법 제9조의 개정과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로 연결시키겠다는 일본

81) 국회에서 함께 통과(2001. 10. 29)된 자위대법 개정안은 자위대가 주일미군기지·자위대시설을 경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기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게릴라 침입방지, 치안유지 활동을 위한 정보수집, 해상침입 선박 저지 등을 위해서도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의 의도로 파악된다.

일본 지원부대의 활동범위는 아라비아해와 미군 거점인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섬, 인도양, 태평양, 페르시아만, 동남아시아, 호주 등으로 대서양을 제외한 전 해상을 활동범위에 포함시켰다.

일본은 이러한 PKO활동과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명분으로 유사법제를 사전에 준비하고 군사력 강화에 힘을 쓸 것이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2002년 4월 17일 유사법제 정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⁸²⁾ 해상자위대는 중장기 방위정비계획에 따라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건조할 이지스 호위함 두 척에 고도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기능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일본이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있는 TMD가 일본에 구축되는 것은 처음이다. 새로 건조되는 이지스 호위함은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교토(京都)의 마이즈루(舞鶴) 기지와 나가사키현의 사세보(佐世保) 기지에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⁸³⁾

설치되는 TMD시스템은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NTWD(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 시스템과 항공기·선박과의 빠른 전술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공동교전능력(CEC) 시스템이다.

미국과 유엔에 지지를 얻은 일본은 정치대국의 역할을 수행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82) 『東京新聞』, 8. 17. 유사법제 정비란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자위대·미군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해안법·건축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손질해 놓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청·국토교통성 등 관련부처 직원 15명으로 정비팀을 구성해 작업하였다. 『東京新聞』, 2002. 4. 18.

83) 『東京新聞』, 2001. 8. 17.

2. 일본의 남북한정책

가. 일본의 대북한정책

2000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 10차 본 회담이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북한측의 요구에 따라 6월 12일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무기 연기되었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측의 수교협상 연기요청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외교적 역량을 정상회담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⁸⁴⁾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는 5월 17일 북·일 수교회담의 연기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끈기 있게 교섭을 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⁸⁵⁾

일본 정부는 4월 10일 정상회담 합의사실이 발표되었을 때 “사상 처음 있는 일로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며 “북·일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고노 요헤이 외상)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6월 15일 고노 요헤이 일본 외상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문이 열렸다”면서 북·일수교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단기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 회담으로 남북이 급속히 가까워질 경우 일·북 국교정상화,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같은 관심사가 뒤로 밀려나고 동북아 역학 구도에서 일본이 갖는 지분이 줄어들어 가는 것이었다. 일본은 한·미·일 가운데 대북 대화가 가장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우려하여 일본은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84) 『동아일보』, 2000. 5. 17.

85) 『중앙일보』, 2000. 5. 18. 모리 총리는 오부치 총리의 타계(2000. 4. 5)로 총리직을 계승하였다. 그는 오부치 총리의 정책과제를 계승해 일본정국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장하는 입장이었다.

고노 외상은 연기된 북·일 수교교섭에 대해서 “남북한이 동일한 민족의식과 원칙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일·북 간에는 일본인 납치의혹 등 문제의식이 서로 다르다. 금방 교섭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⁸⁶⁾

후카가와 유키코에 의하면, 일본 재계는 남북정상회담이 경험의 활성화를 촉진한다지만 수교 이전에 경험에 나서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일본의 국민감정 때문이었다.⁸⁷⁾ 기업차원도 북한의 채무불이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기업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가기를 기대할 수 없었다.⁸⁸⁾ 일부 업계가 50~1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일본의 과거사 청산관련 배상금 비즈니스에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다.

최근 미쓰비시 등의 기업들이 한국의 현대 등 대기업들과 비공식적으로 대북 및 시베리아 자원개발 합작사업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진다.⁸⁹⁾

다른 한편으로 가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전제로 그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의미하며, 또한 북·일 교섭을 진전시키는 데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시켜 일본 국내의 여론도 교섭촉진을 위한 지지를 얻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⁹⁰⁾

86) 『朝日新聞』, 2000. 6. 16.

87) 『조선일보』, 2000. 6. 6.

88) 일본에 대한 북한의 채무가 약 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영구, 「일·북한수교가 남북관계 및 동북아정세에 미칠 영향」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5), p. 22.

89) 『한겨레신문』, 2000. 6. 15.

90) 『한겨레신문』, 2000. 6. 3. 다다시 교수는 북·일교섭에 대해서 일본국

(1) 10차 수교교섭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북한과 일본 간의 제10차 수교교섭 회담이 2000년 8월 21~25일 지바(千葉)현 기사라즈(木更津)에서 열렸다. 회담에는 북측에서 정태화(鄭泰和) 대사가, 일본에서 다카노 고지로(高野辛二郎)대사가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표> 북·일간 쟁점과 양측 입장

쟁 점	북 한	일 본
과거청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사죄 명기 ·일제 36년간의 보상 필요 ·문화재 반환과 보상	·무라야마 담화로 사죄문제 종결 ·보상은 재산청구권 방식 처리
납치문제	·납치는 없음 ·행방불명자는 적십자서 협의	·관계개선을 위해 피할 수 없는 문제
미사일	·시험발사는 인공위성	·장거리는 물론 중거리 미사일의 생산·배치 반대 ·시험발사 중지를 위한 북·미협의 기대
교섭방식	·선 과거청산 후 다른 현안 타결	·납치·미사일 등 현안 일괄처리

양측은 또 외무성 직원의 상호 교류도 합의하는 한편 민간경제인 교류가 바람직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⁹¹⁾ 양측은 그러나 협상의 최대 쟁점인 교

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고 반응도 냉담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북·일교섭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헤쳐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전망했다. 역사의식과 행동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 지도자의 등장을 바란다고 말했다.

91) 『朝日新聞』, 2000. 8. 25.

섭방식이나 과거청산 방법 및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북한은 먼저 과거청산을 다루고 나중에 기타 현안을 해결하자고 한 데 반해, 일본은 북한과 과거 청산 및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에다 미사일 개발문제까지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거청산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사죄와 보상을 주장했으나, 일본은 사죄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담화로 끝났으며 재산청구권 형태의 해결방식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납치 의혹에 대해 “일반 행방불명자 차원에서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 열린 양측의 10차 국교 정상화 교섭은 표면적으로 과거 청산을 주장하는 북한과 납치문제 해결을 주장한 일본이 서로의 원칙만을 고수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뒤에서는 비공식으로 국교 정상화의 실질적인 협상물인 ‘돈 문제’가 협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⁹²⁾ 애초의 ‘전쟁배상’에서 ‘과거보상’으로 물러난 북한측이 1965년 한·일수교 당시의 ‘청구권’으로 다시 물러설 수 있을 것이다.

1965년 한·일 간에 타결된 청구권 자금은 모두 8억 달러였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만 감안하면 35억 달러 정도이다. 그러나 당시의 엔화 가치를 기준으로 일본의 물가 상승률과 이자 등을 감안하면 200억 달러에 이르는 데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이나 총예산에서의 비율을 고려하면 250억 달러까지 늘어난다. 북한은 약 200억 달러, 일본은 50억~100억 달러를 고려하리라는 추측만이 있을 뿐이다.⁹³⁾ ‘계산의 기준’이 마련돼도 유상·무상·민간자금의 구성비,

92) 『朝日新聞』, 2000. 8. 28. 10차 본회담에서 정태화 북한단장은 일본의 경협방안에 대해 “식민지 통치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자존심을 꺾어가면서까지 수교하지 않겠다고 한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제공 시기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북한은 이와 함께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 가능성도 타진했다.⁹⁴⁾ ADB에 가입할 경우 낮은 이자로 장기 개발자금을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으로서도 거의 유일한 대북 협상카드인 경제지원을 호락호락 내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북협상에서 1965년 한·일협정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지원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다카노 대사는 “일본의 지원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일본에 갚지 않은 돈을 먼저 갚으라”고 압박했다.⁹⁵⁾ 일단 수교부터 하면 경제지원이 있을 것이고, 그 돈으로 빚을 갚으면 일본 정부가 보험도 들어주고 추가 지원도 해주겠다는 뜻이다. 물론 골치아픈 ‘과거청산’이나 ‘문화재 반환’ 같은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수교를 맺겠다는 협상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제10차 북·일 수교교섭은 본격 협상의 기반을 다지는 회담이었다. 교섭은 북한의 선 과거청산 요구와 일본의 납치의혹 동시 해결 주장으로 평행선을 그었다. 그러나 양측은 일본의 과거청산과 북한의 납치의혹 문제로 쟁점을 줄임으로써 정치적 타결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 북한의 정태화 대사는 연내 수교 입장도 내비쳤다.⁹⁶⁾ 과거청산을 통한 일본의 경제협력이나 자금지원을 바라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실현 등 정세 변화는 일·북 쌍방에 “대립이 있는 가운데에도 접점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촉진시켰다.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에 걸친 북한과의 적

93) 『한국일보』, 2000. 7. 28.

94) 『日本經濟新聞』, 2000. 8. 28.

95) 『日本經濟新聞』, 2000. 8. 28.

96) 『조선일보』, 2000. 8. 25.

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추진케 한 원동력이 됐고 불투명한 상태의 북·일 수교교섭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북한 측은 “포용정책과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도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제공을 지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도 있다. 북·일 수교에 따른 보상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사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능력이 가장 큰 국가가 일본이므로 그 역할이 주목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수교교섭 이전에 경제협력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북·일 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을 결합시키는 데는 아직 소극적인 듯하다.

대일 청구권 문제나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은 대사급 수교협상 과정에서 타결될 사안이 아니다. 이 두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맞불 카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로서는 부쩍 세를 불린 일본 보수층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당장 자민당내 우파⁹⁷⁾들은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북·일 수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양측의 관계 정상화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대사급 협상보다는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일본과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가려는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고,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총리는 김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다. 모리

97) 대표적인 강경우파는 에토(江藤)·가메이(龜井, 정조회장)파로 자민당 내에서도 제4의 파벌이다. 이념적으로 모리파와의 인연이 깊은 파벌이 에토·가메이파이다. 모리파는 당내 제2의 파벌로 61명의 중의원을 확보하고 있다(2000년 6월 25일 실시된 총선거의 결과). 참고로 전체 중의원은 480석이며 자민당은 233석으로 단순 과반수에 실패했으나 연립3당은 271석을 확보하였다. 『朝日新聞』, 2000. 6. 26; 『한국일보』, 2000. 6. 28.

수상은 7월 23일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김국방위원장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충고를 받았다”며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⁹⁸⁾

납치의혹 문제와 관련, 고노 외상은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본을 출발하기 전날인 7월 26일 남북 일본인 유가족을 만나 납치의혹 해결 노력을 표명했으나, 백남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는 납치의혹이나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⁹⁹⁾

또한 고노 외상은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일본인 납치 의혹이나 미사일문제 등 현안과는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자민당의 노나가 히로무(野中廣務) 간사장도 이 날 일본인 납치 의혹이나 북방영토문제 등 현안의 해결을 전제로 삼지 말고 북한·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¹⁰⁰⁾

나카야마 일·조의원 연맹회장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와 관련, “납치를 전제로 할 경우 일본·북한 관계에 아무런 진전도 없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교섭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외교관계의 성립은 위정자와 외교 당국자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1972년 일·중 국교정상화에는 중국과의 우호관계 수립을 호소하는 일본 국민의 광범위한 운동이 있었다.

7월 3일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를 회장으로 하고 아카시 야스시 전 유엔 사무차장과 경제학자 스미야 미키오 도쿄대 명예교수, 미키 다케오 전 총리 부인인 미키 쓰쓰코를 부회장으로 하는 『일·조 국교촉진국민협회』가 발족했다. 이 협회의 설립기념식에

98) 『朝鮮日報』, 2000. 7. 24.

99) 『朝日新聞』, 2000. 7. 27.

100) 『朝日新聞』, 2000. 7. 27.

는 노나카 히로무 자민당 간사장이 식장까지 찾아와 지지해 주었다. 또 외무성의 아시아 국장이 축사를 하였다.

북·일관계의 걸림돌인 납치의혹 문제를 해결하지는 국민모임이 대대적으로 결성된 것이다. 이 협의회가 직·간접으로 위정자를 압박해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 협의회가 냉소적인 나쁜 여론을 세계적인 추세 즉 한국의 남북정상회담과 조명록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방미(10.10~12), 그리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10.25~27)을 기회로 일본도 북한과 수교해야 한다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리 수상의 적극적인 수교의사, 고노 외상, 노나카 자민당 간사장, 그리고 나카야마 일·조 의원연맹 회장의 유연한 대응, 즉 “납치를 전제로 할 경우 일본·북한 관계에 아무런 진전도 없을 것”이란 견해가 북·일 쟁점을 줄이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교의지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무성의 협상단은 실무적으로 북·일 수교에 대한 쟁점을 줄이는 역할로 협상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2) 일본의 대북 쌀지원과 11차 수교회담

북한과 일본은 10월 30~31일 이틀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1차 북·일 수교 본 회담을 열고 조기수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발표문도 없었고, 다음 협상 일정도 잡지 못했다.

수교회담의 최대 쟁점은 과거청산이며 북한은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이 내세운 것은 경제협력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결국 식민지 지배는 당시로서는 합법적이었고, 따라서 북한이 요구하는 배상이나 보상 방식의 과거청산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의 연장이

다. 돈을 주더라도 베풀어주는 것이지 과거 잘못을 갚는 게 아니며, 그래야 금액 협상과 장래관계에도 유리하다는 셈법이다. 그러면서 일본은 1965년 한·일협약 체결 당시의 경협 방식을 자세히 설명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8월 회담 당시 년지시 이 방안을 비쳤을 때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측은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대북 경제지원으로 총액 90억 달러(약 1조 엔) 규모의 자금원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東京新聞』이 10월 26일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가운데 60%인 50여억 달러는 무상공여, 나머지는 차관 방식에 의한 경제협력으로 추진하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예상외로 강경했다. 이 방안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으로부터 받을 돈의 액수는 같을지 모르지만 ‘명분’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었다. 경협 방식 이외의 ‘카드’를 준비하지 못한 일본측은 기존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났다.¹⁰¹⁾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수준에서 북한을 상대로 사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인 납치의혹에 대해서도 북한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일본측은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북한 적십자사측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짚고 넘어가는 수준에 그쳤다고 한다.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경협과 보상을 분리, 일본측으로부터 강도높은 사과를 받아내고 보상액수도 최대한 높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는 남북관계 해빙과 북·미회담의 진전, 유럽 각국의 잇따른 수교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일본을 초조하게 만들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것으로 보였다.

101) 『朝日新聞』, 2000. 11. 1.

일본도 원칙론을 버리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과 미국을 태우고 북한으로 가는 버스시간에 맞추지 못했다. 그러나 버스는 우리가 타지 않으면 출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¹⁰²⁾ 북한에 대한 한·미·일 3국 공조가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 스스로도 경제개발 자금이 일본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란 얘기이다. 이러한 북·일 양국은 입장차이가 있었으나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실질적·실무적 협의를 진행시켰다고 한다.¹⁰³⁾

9차 협상은 양측이 과거청산과 일본인 납치의혹을 쟁점으로 진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10차 협상에서는 쟁점을 줄이는 데 노력했으며, 11차 협상은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상호 접점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분석되었다.

일본으로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 걸린 북·미 미사일회담을 지켜볼 필요도 있었다.¹⁰⁴⁾ 외무성의 협상은 대사급 실무회담의 한계를 일깨우는 계기도 됐다. 보상 및 납치의혹 문제는 양측의 정치적 결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일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용이하진 않았다. 모리 총리의 일본인 납치의혹에 대한 제3국 행방불명자 처리방안 발설에다 북한의 양보를 기대하며 쌀 50만톤을 지원했으나, 회담은 실무적 수준에 머물렀다.

102) 『朝日新聞』, 2000. 11. 1.

103) 『중앙일보』, 2000. 11. 2.

104) 북한의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방미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10. 12)하는 등 양국은 미사일 등 현안이 명시되지 않는 않았으나 문제해결의 의지를 확실히 표명했으며 양국의 적대적 관계의 해소를 선언하였다. 조명록의 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10. 25)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이 국제 테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고 한다. 이러한 양국의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예상돼 왔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지원하기로 발표한 50만 톤의 쌀을 값싼 수입미를 일절 포함하지 않고 전량 일본산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일본의 『毎日新聞』이 10월 19일 보도했다. 3월의 10만 톤 지원 때 90%를 수입미로 채운 것과 대조되는 이같은 방침은 대규모 쌀지원을 대북 교섭의 촉진제로 활용하는 한편 3년만의 풍작에 따른 국내 잉여미를 줄여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 피해를 덜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였다.¹⁰⁵⁾

대북 지원 쌀을 전량 일본산으로 채우게 된 것은 자민당내 농촌 출신인 소위 ‘농수산족’ 의원들의 의사가 관철된 결과였다. 이 지원 규모는 당초 북한이 요청했던 40만 톤을 웃도는 대규모로 이 때문에 자민당 내에 무성한 반발을 불렀는데, 이들 ‘농수산족’ 의원들은 이를 무마하는 데 앞장서 왔다.

모리정권의 쌀지원 등 대북한 소프트 노선은 “임기중 한 건 하려는 공명심 때문”이란 분석도 나왔다.¹⁰⁶⁾

모리 총리는 오키나와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 폐막을 앞둔 7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충고를 받았다”며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¹⁰⁷⁾

또한 모리 총리가 8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양국 관계개선을 촉구하였다고 한 소식통이 밝혔다.¹⁰⁸⁾ 이 소식통은 7월에서 8월 사이 한 한국인을 비밀리에 만나 서한전달을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¹⁰⁹⁾ 모리 총리는 북·일 외교정상화

105) 자선활동하듯 주기만 한다는 뜻에서 ‘산타클로스 외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 2000. 10. 11.

106) 『東京新聞』, 2000. 10. 10.

107) 『朝日新聞』, 2000. 7. 23; 『동아일보』, 2000. 7. 24.

108) 『조선일보』, 2000. 9. 30.

109) 『중앙일보』, 2000. 10. 13, 한 한국인은 한국계 미 언론인이었다고 한다.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김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나카가와(中川) 관방장관이 여성 스캔들로 경질되었고 경기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모리 내각의 지지율이 15%까지 바닥권으로 떨어져 정권기반이 흔들릴 지경이었다.¹¹⁰⁾ 모두 북한과 관련돼 있다. 보수우파들이 반발하고 야당도 공세를 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 양보를 전제로 한 정치적 타결인들 과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 회담에서 모리 수상과 농수산족 의원들이 북한에 대해 50만 톤을 지원하는 대가성 없는 산타클로스 외교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없는 회담이 되었다. 그러나 외무성 대표단은 국제적인 분위기를 의식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교의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3) 북·일 적십자회담(2000. 4)

2002년 4월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끝난 북·일 적십자회담에서 북한측은 최대쟁점이었던 일본인 납치의혹과 11명을 포함한 일본인 행방불명자 49명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확실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일본측에 신속히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약속했다. 일본측은 과거보다 긍정적인 자세라고 평가했다. 이 회담은 2000년 3월 이후 2년여만에 재개되었으며, 이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양측이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측이 일본에 대해 행방불명자 ‘조사’를 약속해 준 배경의 의

110) 『毎日新聞』, 2000. 10. 30.

미는 다음과 같다. 적십자회담에는 식량지원여부가 걸려 있고, 조총련계 조강(朝銀)신용조합에 대한 일본경찰청의 대대적 수사(2001.11)와 동중국해에서 침몰한 북한 공작선 추정 괴선박 사건(2001.12) 등으로 더욱 악화된 일본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했다고 분석된다. 북·일 적십자회담이 갖는 의미를 일본측에서 본다면 납치문제를 교섭 도중이나 완료 후에 해결해야 할 목표로 보면서도 지속적인 수교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와 함께 납치의혹에 대한 비난의 여론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순화시켜 수교 교섭에 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 동안 일본 국민을 납치해 왔다”고 밝힐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뿐 아니라, 수교를 앞두고 여러 가지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선뜻 해결하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다른 카드는 괴선박카드이었다. 중국정부가 일본의 괴선박 인양작업에 동의(4.5)함으로써, 일본 해상보안청은 인양을 위한 사전조사작업을 5월 1일부터 진행중이며, 몇 구의 시체와 로켓포, 기관총 그리고 탄창 등이 수거되었다고 밝혔다. 인양된 선체가 북한공작선으로 확인되면 당장 6월로 예정된 북·일 적십자회담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북한은 적당한 선에서 막후 협상을 벌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졌다.

(4) 북·일 정상회담(2002.9)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위원장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등 과거보상과 관련, 일본의 경제협력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평양 선언문을 2002년 9월 17일 채택하였으며, 수교재개도 10월부터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배와 관련,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한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혔다. 김

정일 위원장은 납치문제에 직접 관여(군부강경파)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북한이 일본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행방불명자 문제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 납치문제에 대해 큰 기대는 곤란하며, 안부 확인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고이즈미측은 기대하였으나, 11명의 행방불명자 전원의 안부가 북한에 의해 확인되었다.

북한은 핵사찰에 협력하겠다는 의사와 또한 2003년 이후 탄도미사일 실험을 무기한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미·북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김 위원장은 또 일본 근해에 출몰했다가 격침된 괴선박에 대해서도 북한 공작선이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납치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전향적인 사고를 보여주었고, 핵·미사일 문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납치문제와 관련, 앞으로 사망자들 사인에 대한 조사, 생존자들의 조속한 귀국, 재발방지대책 등이 양국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북한에 납치됐다 사망한 8명의 일본인들에 대한 타살의혹이 쟁점으로 부각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납치문제회담과 정상화교섭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하고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일 정상회담에서 IAEA의 핵관련 시설 사찰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찰단의 자유로운 활동의 보장, 시기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북한은 2003년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무기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기존의 북·일 수교협상에서 핵·미사일 문제는 주권에 관련된 사안이라며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미국과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양국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을 보면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문 수준이었고, 양국은 식민지배로 생긴 각자의

재산청구권을 포기하며, 북한에 대한 보상은 경제협력방식으로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 방식은 1965년 한·일 경제협력방식이며, 당시 한국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즉 5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1965년과 2002년의 시간차, 북한의 심각한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북한지원 규모는 최소한 1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수교 보상금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11년간 난항했던 수교문제를 북·일 양국은 다음달부터 재개하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양국이 단번에 해결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에서 핵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협력도 곤란하다는 뜻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분명히 전달하면서, 북한과의 수교교섭과정에서 미국과 공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북·일 수교는 미·북 대화의 폭과 속도에 사실상 연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보상은 현물 및 기술 협력 그리고 인적 자원의 형태로 제공되고 이 보상금의 용도 및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북한이 일본과 합의해야 한다면, 이는 장래 북한의 경제개방을 유도할 가능성을 크게 내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¹¹⁾ 수교후 일본정부는 일본기업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및 기간사업의 개발에 참여시킬 것이다. 북·일수교후 북한과 일본 사이의 경제교류는 단기적으로 북한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1) 김영춘,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연구: 북·일관계 정상화와 남북한 관계」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44

(5) 12차 수교회담

북·일 12차 수교 본회담에 앞서 북한이 2002년 10월 3~5일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에게 수년 전부터 핵무기 개발 계획을 진행시켜 왔음을 시인했다고 한·미 양국 정부가 10월 17일 동시에 발표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핵 활동을 동결기로 한 1994년의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북·미 관계를 축으로 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이 합의에 따른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였다.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는 10월 27일 북한에 핵개발 계획을 신속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기로 합의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 중인 3국 정상은 로스 카보스에서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북한은 2002년 10월 29일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서 열린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일본 관리들이 밝혔다.¹¹²⁾ “일본 관리들이 핵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지난 26일 한·미·일 3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들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선 핵은 물론 그 이상의 무기도 만들 수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적대 자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관리들

112) 『毎日新聞』, 2002. 10. 30.

은 전했다.

2년만에 열린 이 날 수교회담에서 스즈키 가쓰나리(鈴木勝也) 일본 대표는 “납치문제 해결과 핵개발 중지가 최우선 과제이며, 이것이 선행되어야 국교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스즈키 대표는 생존한 납치 피해자 5명 가족의 일본 영구 귀국 허용, 납치 피해자 8명의 사망원인 진상 규명,¹¹³⁾ 이른 시간 내에 핵사찰을 받고 핵개발을 중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태화 북한대표는 “국교 정상화의 우선 선결과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 등 과거 청산”이라며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부터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스즈키 대표는 “경제협력은 국교 정상화 이후에 가능하다”고 맞섰다.

북한과 일본은 10월 30일 핵 문제 등을 다룬 북·일 안전보장 협의를 11월에 개최기로 합의하고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서 열린 이틀간의 국교 정상화 회담을 마쳤다.

회담은 핵 개발 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진전없이 끝났으나 북한은 11월 말 국교 정상화 회담을 다시 열자고 일본 측에 제안했다. 북한은 또 일본에 북·미간 중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북·일 양국간의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113) 일본 정부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사망 진상조사를 위한 ‘사실(事實)조사단’을 평양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 함께 참석했던 아베신조 관방 부(副)장관은 25일자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망은 어디까지나 북한측의 발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북한은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또한 북한에 납치됐다 24년만에 귀국한 피랍자 5명의 가족들은 17일 ‘피랍자를 북한으로 돌려 보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피랍자를 10월 27일쯤 북한에 돌려 보낼 예정이었다.

확산, 생존한 납치피해자 5명 가족의 일본 영구귀국 허용 및 납치 피해자 8명의 사망원인 진상규명 등의 문제로 관계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더붙어서 미국은 북한에게 주민억압체제 청산 등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¹¹⁴⁾

북한은 11월 16일 일본이 식민지 피해를 보상하지 않을 경우 미사일 발사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 일본이 9월 17일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실험 유예(모라토리엄) 약속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¹¹⁵⁾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 국민과 군부가 미사일 발사실험 유예를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일본의 대한국 정책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미·일 안보관계는 재정립의 계기를 맞이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은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일 양국은 1996년 4월 냉전 종식 이후의 양국 안보관계의 새로운 이정표인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1997년 9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유사사태 발생시 일본의 대미 후방지원의 길을 열었다. 그에 의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미국을 후방지원하는 과

114)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12월부터 대북 중유(重油) 제공을 중단키로 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는 데 대한 첫 제재조치다. 이 같은 조치는 또 북한이 비밀 핵무기 개발로 제네바 합의를 어긴 만큼 미국도 이에 맞서 의무를 이행치 않겠다는 뜻이다. 『朝日新聞』, 2002. 11. 15

115) 『조선일보』, 2002. 11. 18.

정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한·일 간의 직접적인 안보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대미 군사지원의 반경을 한층 강화하였는데, 미·일 양국이 보는 한반도 지역에서의 잠재적 도발국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북한이며 주변지역에서의 잠재적 무력 사용국은 중국일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미·일동맹은 소련이라는 가상적을 결여한 새로운 국제환경을 맞이하여 동맹의 존폐 여부를 놓고 고민하였고, 결국은 가상위협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안보협력관계를 존속시켜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에게 있어서는 가깝게는 북한 위협을, 멀게는 중국과의 지역 패권경쟁을 염두에 둘 때 여전히 미국의 안보우산이 유용할 것이며, 미국에게 있어서는 일본의 핵무기 보유와 재무장을 억제하고 중국의 지역패권 추구를 견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일본과의 안보유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미·일 안보관계의 재정립에 즈음하여 일본은 한국과의 안보관계 역시 향상시키기를 희망한다. 현재 일본의 북한의 대남, 혹은 대일 도발은 물론이거니와 만약 북한 체제가 갑작스런 붕괴나 극심한 내부혼란에 빠질 경우 일본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으로 인한 유사사태 때문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 좋든 싫든 직·간접적으로 이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동맹이 발동하여 미군이 개입하게 되어 있고, 미국의 군사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과 군사협력 조치를 미리 마련하고 양국간 관련 정보를 수시로 교환함으로써 한·미·일 3자간 안보공조를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장기적으로는 21세기 중반 중국 국력의 부상을 염두에 둘 때, 미·일 양자구도보다는 한국을 포함시킨 3자구도가 보다 든든한 방

패막이 되어 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현재 한·일 군사관계는 인사교류 정도의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대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역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신가이드라인의 실행내용을 놓고 명시적인 협약이나 합의 수준은 아니라도 한·일간에 밀접한 정책협의를 펴 두어야 실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혼선을 막을 수 있다.¹¹⁶⁾

한·일안보협력은 북한으로부터 야기되는 한반도 유사상황을 염두에 둔 상황이다.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와 평화유지가 목적일 뿐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를 야기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일본정부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 국내에서의 인식은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시각에 의하면,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간의 군사대치상태의 해소는 일본의 안보환경을 유리하게 강화해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통일한국의 출현은 일본경제에게도 플러스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즉, 통일한국의 경제력은 일본과 비교해 볼 때 규모적으로 작고 기술수준도 낮기 때문에 일본경제에 위협이 되기보다는 시장과 노동력 제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한편, 통일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통일한국은 중국 또는 러시아로부터 견제를 받게 될 것이

116) 향후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있어서 한국은 양국간에 혼선이나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분야에(특히, 주권관련사항) 우선 주목해야 한다. 유사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양국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부터 협의기구를 가동하고 각종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므로 일본을 대상으로 한 군사력 전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정적인 시각에 의하며 통일한국의 군사력·경제력은 일본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즉, 통일한국은 북한의 110만 명과 한국의 60만 명을 합친 17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어 일본 자위대 25만 명 병력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너무 크며 통일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7,000만 명 가까운 인구를 보유하게 될 통일한국은 남쪽의 기술, 자금과 북쪽의 노동력,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고 특히 군사비의 절감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기할 수 있어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상반되는 견해 중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일반의 일본 대중들에게 더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가 될 것이다. 즉, 한반도의 분단상태의 지속과 남북한과의 동시 수교로 인한 영향력 증대라는 것이 일본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 통일이 역사의 불가피한 대세로 굳어질 경우, 통일협상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시기에도 한반도에서 자국의 안보 및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한반도 외교정책에 있어서 일본은 한국과의 우호·협력증대를 통한 신뢰관계 구축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국교 정상화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 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냉전시에는 일방적인 한국 중시의 정책을 전개하였으나 냉전의 종결로 인한 정세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추진이 일본 외교의 중요한 과제로서 부상되고 있다.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하지만 기존의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즉, 북·일관계의 진전사항을 사전에

한국측과 협의하여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일본 정부는 기존의 한국과의 관계를 대폭 손상시키면서까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지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이에 전적으로 구속을 받으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정을 진행시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역사문제의 지속적인 갈등과 신뢰부족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는 안보 및 경제문제에 있어서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주의 노선의 추구로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한·일간의 우호적인 관계는 1995년 여름 일본국회 내에서 논의된 ‘부전결의’부터라고 할 수 있다.¹¹⁷⁾ 전후 50주년을 맞이해서 채택된 ‘부전결의’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나 무라야마 수상이 자신의 내각에서 ‘부전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민당을 비롯한 보수적 의원들의 저지로 결국 일본의 아시아 침탈을 솔직히 시인하지 못하고 일본은 단지 당시의 제국주의적 성향에 편승한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에토 총무청 장관의 망언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한국민은 물론 김영삼 대통령 역시 이러한 일본 내의 움직임에 불만이었는데, 이러한 태도는 1995년 8월 15일부터 시작된 조선총독부(중앙청) 건물의 해체와 같은 해 11월에 개최된 오사카 APEC회의에서의 ‘버르장머리’ 발언으로 표출됐다.

불편한 한·일관계를 변화시킨 주역이 김대중정부였다. 한·일 양국은 1998년 ‘한·일 공동선언 -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과 그에 따른 부속의 행동계획(Action Plan)에 서명하고 과거

117) 부전결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면우, “일본경제의 우익, 우익성,” 김호섭 외, 『일본우익연구』 (서울: 중심, 2000), pp 111~206.

문제에 너무 구속받지 않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보다 고차원의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하기로 약속하였다.¹¹⁸⁾ 2002년 6월에는 한·일양국이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고 국민들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에는 과거사, 독도, 어업, 경제불균형문제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한·일간의 현안은 과거청산문제이다.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자체 결여는 한국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일본에서의 역사 교과서 검정 및 채택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정부가 강한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교과서는 결국 채택되었다. 일본에서는 2002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8종의 새 역사교과서가 2001년 4월 3일 검정을 통과함으로써 역사왜곡 논란이 빚어졌었다. 그 중에서도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1997.1 결성)이 중심이 되어 만든 새 교과서가 황국사관적 민족주의에 기울어 한국 등 관련 국가의 역사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어 비판의 표적이 됐다. 또 다른 역사교과서들도 군대위안부에 관한 기술을 삭제하고,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진출’로 바꾼 점 등이 문제가 되었다.

고이즈미 총리가 8월 14일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는 것은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고 일본의 우경화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한국은 비판하였다. A급 전범 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참

118) ‘공동선언’에는 과거사를 포함한 양국관계에 대한 기본 인식이 표명되었으며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은 5개 항목, 즉 ① 양국 간 대화 채널의 확충, ②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③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④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 ⑤ 국민교류 및 문화 교류의 증진 등이 서술되었다.

배는 교과서 문제와 비견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한국정부는 한·일 역사인식과 관련,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는 한 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환경의 변화(남북대화의 재개, 미국의 테러참사, 월드컵 협조 등)를 내세워 일본측이 제의한 정상회담(10.15)를 받아들였다.

우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던 역사공동연구를 합의(10.15)하였으며, 또한 10월 20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APEC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정부가 이 연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서도 일본측은 10월 15일의 정상회담에서 밝힌 ‘새 참배장소 건설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10월 20일 정상회담에서는 이것을 위해 연내에 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한·일 정상회담(2001)에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남쿠릴열도 지역 어업 분쟁으로 최악의 국면을 맞았던 양국관계는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별다른 협의를 못하고 ‘공동연구를 양국정부가 지원한다’는 수준에서 결말을 보았다. 한국의 학자들은 일본이 피해당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역사왜곡을 피해하려는 의도라고 인식하고 있다.

두 번째 현안은 독도문제이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인정치 않고 있으며, 이 섬의 건축물 및 관헌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독도문제의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1996년에는 독도문제가 다시금 한·일간에 불거져 나왔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공히 200해리 경제수역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케다 외상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면서 독도에서의 시설물 건설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자, 성난 한국민들은 일장

기와 이케다 외상의 초상을 불태웠고 김영삼 대통령 역시 이러한 요구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명하면서 독도는 한국영토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것임을 기대지 일본대사에게 전달케 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3월 초에 개최된 방콕에서의 정상회담에서도 하시모토 수상에게 전달됐다.¹¹⁹⁾

자민당이 중의원 총선거를 겨냥해 강령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한 것이 밝혀지자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이에 따라 한국 외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러한 자민당의 움직임을 ‘무책임’한 것으로 비난하고,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예의 참배를 용인하는 자민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1998년 9월 24일 신어업협정의 최종안이 타결되었다. 독도문제는 주변 12해리 영해를 제외한 주변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거론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켜갔다. 한국의 실효적 지배는 계속된다지만 독도를 지명이 아닌 좌표로 표기하고 그 영유권을 명시하지 못한 것은 우리로서는 아쉬운 점이다. 근본적으로는 아직도 독도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일본내 일부 우익인사들의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언제든지 양국간의 긴장관계를 촉발시킬 소지가 있으며, 한국내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일 양국간의 가장 큰 현안은 만성적인 무역불균형문제이다. 일본 제조업의 범아시아 분업체제에서 소외된 채 일본 부품수입 의존적인 한국의 가공무역 구조는 결과적으로 대일무역역조 문제를 일상화시키게 된다. 한국의 대일무역역조는 1970년대 후반에 무역수

119) 독도문제가 문제시된 1996년 3월에 방콕에서 있었던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수상간의 정상회담에서 각자는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서로 확인했지만, 영유권문제는 일단 접어둔 채 경제수역의 획정과 독도주변에서의 어업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킬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게 되었다.

지 적자폭이 40억달러 이상으로 급격히 확대된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1995년과 1996년에는 15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적자폭은 IMF 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46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1999년에 경기회복과 함께 82.2억 달러, 2000년에는 113.6억 달러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일 양국의 50대 수출상품 중 21개 품목이 일치하며,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품목들은 일본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 수출상품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양국의 전기전자와 자동차를 위시한 수송기기와 같은 가공조립형 산업은 모두 수출 1, 2위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서 양국 간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데 현실적으로 기존의 구조를 타파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또한 문제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관련된 소극적인 자세도 시정이 필요하다. 일본은 기술이전으로 한·일 양국 간 경쟁관계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소위 ‘부메랑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아시아와 일본의 경기불황과 회복에 밀접한 상호의존성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면서, 또한 세계 지역통합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안하였다. 특히 일본은 경제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과 싱가포르와의 경제통합이 갖는 잠재적 이익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¹²⁰⁾

120) 通商産業省, 『通商白書 2000』, 제3장 1, 3절 참조, 한국정부는 한·일 FTA와 한·중 FTA를 동시에 개별 추진하는 전략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일·중 양국에 균형을 취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숨어 있다.

IV.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1. 변화촉진요인

일본의 대한반도 관계의 변화에 대한 개념은 첫째, 냉전시대에 비해 냉전이후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이익의 자국중심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며, 둘째, 냉전구도 붕괴이후 전략적 안보협력관계가 선택적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며, 셋째, 일본의 남북 등거리 외교 가능성이 증대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한·일관계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는 현안의 북·일수교 외에도 일본의 국제역할증대 정책의 일환인 미·일관계의 강화, 군사현대화 및 해외파병정책 그리고 일본의 신보수주의화 등을 변수로 볼 수 있다.

가. 미·일관계 강화

외교·안보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전환한 부시 행정부로서는 일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인 중국을 억제하는 데 미·일동맹은 필요 불가결하다. 국무부 부장관으로 있는 리처드 아미티지와 나이 하버드대 교수 등이 2001년 말에 작성, 발표한 초당파 대일정책보고서에서 미·일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한 안보역할 분담, 관련법 개정을 통한 PKO활동 참가 확대,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미국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아미티지는 2001년 5월 8일 동경에서 “미·일동맹을 현재의 미·영

동맹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며 “이를 위한 모든 현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시 정부의 일본중시정책을 강조하였다.¹²¹⁾

일본 입장에서도 미·일동맹 강화는 바람직하다. 군사비 부담은 늘더라도 아·태지역에서 일본의 입지가 강화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비록 미국에 의존하는 종속적 지위라 할지라도 준패권국가로 행세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 개정에 앞서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서라도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할 움직임이다.

미·일관계 강화로 인한 변화들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은 주변국들에 대한 일본의 강경자세이다. 1997년 9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유사사태 발생시 일본은 후방지원의 길을 열었다. 그에 의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미국을 후방지원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발행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한·일간의 직접적인 안보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대미 군사지원의 반경은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한국 및 주변국들과 계속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역시 미·일강화로 세력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121) 『朝日新聞』, 2001. 5. 9. 아미티지는 미국의 MD체제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방일하였다. 미·일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일본의 위상은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아시아에서 영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대서양과 유럽대륙을 잇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에 비하면 미·일동맹은 편향적이다. 주변국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일본이 태평양과 아시아를 잇는 중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군사현대화 및 해외파병정책

일본 지원부대의 활동범위는 아라비아해와 미국 거점인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섬, 인도양, 태평양, 페르시아만, 동남아시아, 호주 등으로 대서양을 제외한 전 해상을 활동범위에 포함시켰다.¹²²⁾ 일본은 이러한 PKO 활동과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명분으로 유사법제를 사전에 준비하고 군사력 강화에 힘을 쓸 것이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2002년 봄에 유사법제 정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¹²³⁾

해상자위대는 중장기 방위정비계획에 따라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건조할 이지스 호위함 두 척에 고도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기능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일본이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있는 TMD가 일본에 구축되는 것은 처음이다. 새로 건조되는 이지스 호위함은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교토(京都)의 마이즈루(舞鶴) 기지와 나가사키현의 사세보(佐世保) 기지에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¹²⁴⁾ 미국과 유엔의 지지를 얻은 일본은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유사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미 군사지원의 역할을 발빠르게 수행할 것이다.

다. 일본의 신보수주의 강화

고이즈미 정권의 우경화 및 안보역할 확대의 대표적인 예는 역사

122) 『毎日新聞』, 2001. 11. 31.

123) 『東京新聞』, 2001. 8. 17. 유사법제 정비란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자위대·미군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해안법·건축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손질해 놓는 것이다.

124) 『東京新聞』, 2001. 8. 17.

교과서 왜곡,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¹²⁵⁾ 등이며 유사법제 정비법안도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2002년 9월의 북·일정상회담은 일본의 납치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고 싶은 반복정서와 우경화 영향으로 일본의 외교행위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고이즈미 총리의 국교가 없는 북한방문은 상황대응형이었던 일본외교가 상황조성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이즈미 총리는 미국이 이라크 침공계획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한반도에서의 상황대응적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는, 국제 및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국내 정치변동, 경제의 침체 및 금융 위기가 정체성의 위기로 이어졌고 이것이 일본인의 불안심리를 확산시키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1990년대 들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배경에는 자유주의 사관(史觀)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정계, 언론계가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사관은 도쿄대 후지오카 노부카츠(藤岡信勝) 교수가 1994년 주창한 개념으로, 이는 일본인이 잊어 온 국가의식과 역사적 자신감을 회복하자는 사관이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시작된 일본의 우경화는 냉전종식과 국제 질서 재편과정에서 자위대의 활동영역 확대 등 안보정책과 맞물려 전개되고 있다.

125)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할 새로운 국립묘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2002년 11월 18일 고이즈미 총리는 “새 시설이 야스쿠니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야스쿠니는 야스쿠니”라고 말했다. “새 시설이 생긴 뒤에도 야스쿠니를 참배하겠나”라는 질문에 “시기를 봐가며 참배하겠다”고 야스쿠니를 포기할 뜻이 없음을 나타냈다. 『毎日新聞』, 2002. 11. 19.

라. 한반도 영향력 확대 모색

일본은 동북아질서의 변화, 미·일간 동맹강화에 따른 일본의 역할 증대, 북한의 대일접근 정책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일본은 한반도에서 등거리외교를 구사함으로써 남북한을 일본영향권에 두고 싶어 한다.

북·일수교 후 주변 4강에 의한 교차승인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일본을 비롯한 주변 4강은 순수한 한반도의 평화보장 차원을 넘어서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지분확보에 노력할 것이다.

2. 지속요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반도 관계를 변화·촉진시키는 요인이 있는가 하면, 양국관계를 지속·유지시키는 요인도 존재한다. 지속요인은 미국의 균형자 역할, 한·미 관계유지, 그리고 한·일 경제협력 및 교류확대 등이다.

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균형자 역할

미국은 태평양 연안국들과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군사력 전진배치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조정자로서 이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적 패권국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힘의 공백을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이행기에 북한체제의 붕괴로 야기될지도

모르는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위험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한반도 통일과정 및 통일후의 동북아 안정을 위하여 주한미군이 지역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나. 한·미관계 유지

한·일간의 안보관계에 있어서 큰 특징은 미국을 중개로 하는 관계이다. 한·일 안보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큰 틀은 한·미와 미·일 안보 체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한·미와의 전략적 유대관계로 상당 기간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틀 내에서 전개될 것이고, 또한 일본은 한국에 갖고 있는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편향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한·일경제협력 및 교류확대

최근 일본은 아시아와 일본의 경기불황과 회복에 밀접한 상호의존성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면서, 또한 세계 지역통합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안하였다. 특히 일본은 경제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과 싱가포르와의 경제통합이 갖는 잠재적 이익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2003년 발효되는 한·일 투자협정은 우리 나라가 체결하는 최초의 투자자유화 협정으로 한국 투자자는 일본에서, 일본 투자자는 한국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다. 이 협정으로 한·일간의 투자 및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한·일 양국간 교류 확대는 2002년 월드컵을 공동개최 하는 등

역사,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민족,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교류는 한·일관계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전망

향후 일본의 대한반도 관계를 변화시키고 갈등을 빚을 요인은 일본의 군사현대화 및 해외파병정책 그리고 신보수주의자들의 등장이다. 최근 일본정계에는 총보수화 현상인 우경화가 확산되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주도하는 해외파병을 위한 유사정비 법안 등이 마련되고 있으나, 이러한 일본의 전략은 미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범위내에서 추진될 것이고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등 군사대국화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대한반도 안보정책은 미·일관계라는 큰 틀 내에서 일본의 역할증대, 주변국의 유사시 후방활동 등 그리고 신보수주의자들의 행동 등 다양한 갈등요인으로 인하여 한국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만 국교단절 등의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북·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외교행위가 상황대응형에서 상황조정형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국교가 없는 북한을 고이즈미 총리가 방문한 것은 일본열도에 들끓는 납치문제에 대한 반복정서, 1990년대부터 일어나고 있는 우경화 분위기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계획에 몰두하는 사이의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북·일수교 후 4강의 교차승인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

체계가 국제적으로 보장받을 경우에도 일본은 평화보장차원을 넘어 자국의 영향력과 지분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통일 후에도 주둔하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경제정책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FTA(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하는 등 한국을 지역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한·일양국은 한·일 투자협정을 체결한 바와 같이 한·일간의 투자 및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급속한 변화없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정책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아래서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증대를 통한 신뢰구축관계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추구할 것이나, 기존의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한국편향의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V. 결론

일본은 한반도와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하여 국제정세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중요시 하여 왔다. 그러나 전후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미국의 동북아정책 및 동북아의 국제질서 그리고 미·일관계 및 한·일관계에 의해 제약을 받아왔다. 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위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1965)를 중재하였다.

닉슨 독트린 이후 미·중 화해로 동북아의 데탕트 분위기 하에서, 한국은 7·4 공동성명에서 한국정부가 북한정부를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자 일본은 정경분리정책을 들고 나와 비정치 분야(무역)에서 북한과 관계를 맺으면서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였다.

냉전이후 일본은 동북아질서의 변화, 미·일간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에 따른 일본의 역할 증대, 한국의 북방정책 성공 및 북한의 대일접근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북수교 교섭에 의욕을 보였다. 8차(1991.1~92.11)에 걸친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교섭 중단은 표면적으로는 이은혜 문제를 계기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일교섭 중단의 실질적 원인은 북한의 핵사찰 문제에 있었다.

1994년 10월 21일 미·북 간의 핵교섭이 타결(제네바 회담)되자, 일본의 연립여당 3당 대표단이 1995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방북하여 북·일 수교교섭의 전제없는 재개에 합의하였다.

한국의 잠수함사건(1996.9) 이후 납치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계의 사사가와 요헤이(笹川陽平) 일본재단(舊日本船舶振興會) 이사장이 1997년 6월 하순 방북하여 장성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조직)부장(김정일의 여동생 김

경희의 남편)과 만나서 일본인 처 귀향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1997년 11월 8일 북한에 있는 일본인 처(1,831명) 중 제1진 15명이 일본을 방문하였고, 제2진 12명이 1998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일본에 도착하였다.

일본인 처 귀향문제는 언론과 여론의 반복정서를 가라앉히기는 커녕 오히려 납치사건을 더욱 부각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이 당시 일본측이 납치문제를 수교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는 것은 자민당이 국민여론의 악화로 더 이상 수교교섭을 서두를 계획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사건과 1999년 들어서서 일본인 납치의혹사건과 3월의 북한공작선의 일본영해침투사건, 그리고 7월과 8월의 북한 미사일 시험 재발사 움직임 등으로 일본과 북한관계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였다. 북한은 일본에 대해 ‘접근과 미사일 협박’이라는 이중전략을 전개하였고, 일본은 북한에 대하여 한·미·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화과 억지’ 전략을 추구하였다.

북한과 미국은 1999년 9월 12일 베를린 고위급회담에서 대포동 미사일 발사 유예와 경제제재 해제 및 식량지원을 맞바꾸는 타협안에 합의했다.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낸 것은 무엇보다 짝이었다. 북한은 1999년 12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이끄는 초당파 의원단이 찾아갔을 때부터 식량을 요구했다.

일본과 북한의 9차 수교교섭 본 회담이 2000년 4월 4일에서 8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1991년 1월에서 1992년 11월까지 8차 회담이 이은혜 문제로 결렬된 후 7년 5개월만에 재개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일본측에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반면 일본은 배상은 곤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핵 무기 및 미사일 개발 중단, 일본인 납치의혹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

치를 요구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변화된 일본의 안보정책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오자와의 보통국가론 논쟁은 북한 핵문제, 노동1호 발사실험 그리고 경제난 심화를 계기로 북한장래와 한반도 유사에 대한 불안심리와 맞물려서 이루어졌다. 미·일 신안보선언(1996) 이후 자민당의 국방측 및 자위대의 간부들은 신대강(1995)이 평화시에서 일본 주변 유사시로 이해하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였고, 이 점을 보충하기 위해 신가이드라인을 작성(1997)하였다. 신방위협력지침의 가장 큰 특징을 일본의 군사역할 범위를 확대,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유사시에도 자위대가 일정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미국과의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참여 명분을 주었다는 데 있다.

일본 자위대의 방위전략(2001)이 옛 소련을 주적개념으로 한 ‘북방방위’에서 중국을 겨냥한 ‘남방방위’로 변화하였다. 새로운 방위 계획은 부시 행정부의 중국·북한 견제전략이나 일본 우익세력의 중국·북한 위협론과 맞물린 것이다.

미국의 테러 참사(2001.9.11) 이후 일본정부는 미국의 테러보복 공격을 계기로 자위대가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테러대책 특별법안’과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한 ‘자위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0.5)하여 통과(10.29)시켰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제10차 북·일 수교교섭은 본격 협상의 기반을 다지는 회담이었다. 양측은 일본의 과거청산과 북한의 납치의혹 문제로 쟁점을 줄임으로써 정치적 타결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 북한의 정대화 대사는 연내 수교 입장도 내비쳤다. 남북정상회담 실현 등 최근 정세 변화는 북·일 쌍방에 현안에 대한 “대립이 있는 가운데에도 접점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촉진시켰다.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위원장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등 과거보상과 관련, 일본의 경제협력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평양 선언문을 2002년 9월 17일 채택하였으며, 수교재개도 10월부터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배와 관련,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한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혔다. 김정일 위원장은 납치문제에 직접 관여(군부강경파)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북한이 일본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행방불명자 문제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

북한은 핵사찰에 협력하겠다는 의사와 또한 2003년 이후 탄도미사일 실험을 무기한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미·북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납치문제와 관련, 앞으로 사망자들 사인에 대한 조사, 생존자들의 조속한 귀국, 재발방지대책 등이 양국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북한에 납치됐다 사망한 8명의 일본인들에 대한 타살의혹이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에서 핵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협력도 곤란하다는 뜻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분명히 전달하면서, 북한과의 수교교섭과정에서 미국과 공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북·일 수교는 미·북 대화의 폭과 속도에 사실상 연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냉전이 종식됨으로서 미·일 안보관계는 재정립의 계기를 맞이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은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일은 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유사사태 발생시 일본의 대미 후방지원의 길을 열었다. 그에 의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미국을 후방지원 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한·일 간의 직접적인 안보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미·일 안보관계의 재정립에 즈음하여 일본은 한국과의 안보관계 역시 향상시키기를 희

망한다.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하지만 기존의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즉, 북·일관계의 진전사항을 사전에 한국측과 협의하여 조정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2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8종의 새 역사 교과서가 2001년 4월 3일 검정을 통과함으로써 역사왜곡 논란이 빚어졌었다. 고이즈미 총리가 2001년 8월 14일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는 것은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고 일본의 우경화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한국은 비판하였다.

한·일 양국간의 가장 큰 현안은 만성적인 무역불균형문제이다. 일본 제조업의 범아시아 분업체제에서 소외된 채 일본 부품수입 의존적인 한국의 가공무역 구조는 결과적으로 대일 무역역조 문제를 일상화시키게 된다. 최근 일본은 아시아와 일본의 경기불황과 회복에 밀접한 상호의존성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면서, 또한 세계 지역통합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안하였다.

한·일관계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는 현안의 북·일수교 외에도 일본의 국제역할 증대 정책의 일환인 미·일관계의 강화, 군사현대화 및 해외파병정책 그리고 일본의 신보수주의화 등을 변수로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은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유사상황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우경화 영향으로 한국 및 주변국들과 계속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역시 미·일강화로 세력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대한반도 관계를 변화·촉진시키는 요인이 있는가 하면, 양국관계를 지속·유지시키는 요인도 존재한다. 지속요인은 미국의 균형자 역할, 한·미 관계유지, 그리고 한·일 경제협력 및 교류확대 등이다. 한·일간의 안보관계에 있어서 큰 특징은 미국을 중개로 하는

관계이다. 한·일 안보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큰 틀은 한·미와 미·일 안보체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한반도 안보정책은 미·일관계라는 큰 틀 내에서 일본의 역할증대, 주변국의 유사시 후방 활동 등 그리고 신보수주의자들의 행동 등 다양한 갈등요인으로 인하여 한국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만 국교단절 등의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북·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외교행위가 상황대응형에서 상황조정형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국교가 없는 북한을 고이즈미 총리가 방문한 것은 일본열도에 들끓는 납치문제에 대한 반복정서, 1990년대부터 일어나고 있는 우경화 분위기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계획에 몰두하는 사이의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급속한 변화없이 한반도의 개입과 현상 유지정책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아래서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증대를 통한 신뢰구축 및 적극진출정책과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나, 기존의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한국편향의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영춘.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연구: 북·일관계 정상화와 남북한 관계」.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배정호.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실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9.
- 한영구. 「일·북한수교가 남북관계 및 동북아정세에 미칠 영향」.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5).
- Mochizuki, Mike ed. *Toward A True Alliance: Restructuring U.S.-Japan Security Relation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7.
- Triffin, Robert. *Gold and Dollar Crisis: The Future of Convertibility*.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61.
- 防衛協力小委員會. 「日本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の見直しに關する中間とりまとめ」. 東京: 防衛廳, 1997.
- 「世論調査年鑑」. 東京: 日本總理部, 1991.
-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 東京: 講談社, 1993.
- 日本外務省編. 「外交青書: わが外交の近況」. 1969.
- 佐佐木芳隆. 「新秩序への道: 多國間安保日米同盟」. 東京: 中央公論社, 1995.
- 通商産業省. 「通商白書 2000」.

2. 논문류

- 김영춘. “수교협상이후의 한·일관계.” 『국제정세』. 1990.7.
- 배정호. “탈냉전기 북·일관계의 변천과 일본의 대북한 ‘대화화’역지 정책.”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1999.
- 서동만. “북·일 관계의 현황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1998.10.7.
- 이면우. “일본경제의 우익, 우익성.” 김호섭 외. 『일본우익연구』. 서울: 중심, 2000.
- 전동진. “김정일 체제 등장과 일·북한 관계개선 전망.” 『통일연구논총』, 3권 2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한영구. “일·북한 수교문제의 현재와 미래.” 『국제문제』. 1995.8.
- _____. “한국 대일 외교의 방향과 과제.” 『국제정세』. 1990.5.
- Nye, Joseph. “Coping with Japan.” *Foreign Policy* 89 (Winter 1992~93).
- 加賀孝英·笹川陽平. “金正日への衝撃密書.” 『文藝春秋』. 1998.6.
- 岡崎久彦. “日朝これだけは譲れない.” 『諸君』. 2000.11.
- 渡邊沼夫. “日米安全保障關係の新展開.” 『國際問題』. 1998.3.
- 山本剛土. “日·朝政府間交渉への視點.” 『世界』. 1990.10.
- 船橋洋一. “一米安保再定義の全解剖.” 『世界』. 1996.5.
- 小此木政夫. “日朝國交交渉と日本の役割.” 小此木政夫 編. 『ポスト冷戰の朝鮮半島』.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94.
- 小川彰. “安全保障政策のアクターと意思決定過程, 1991~98.” 外交政策決定要因研究會編(主査) 橋本光平. 『日本の外交政策決定要因』. 東京: PHP 研究所, 1999.
- 田邊誠, 金丸 訪朝團, 舞台裏. 『日刊 Asahi』. 1990.12.

前田壽夫. “カイトテイン 見直し=戦争への道.” 『軍縮問題資料』.
1997.8.

_____. “97年版防衛白書を問う:新カイトテインに向けて.” 『軍縮
問題資料』. 1997.11.

田中明. “北朝鮮コメ援助は平和ボケ.” 『諸君』. 1995.9.

土門剛. “コメ大過剰時代.” 『世界』. 1997.10.

3. 기타

『동아일보』.

『중앙일보』.

『朝鮮日報』.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讀賣新聞』.

『東京新聞』.

『毎日新聞』.

『日本經濟新聞』.

『朝日新聞』.